

統一韓國의 등장에 따른
東北亞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1994. 12.

姜元植 (國際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이 연구는 國際政治理論에 입각하여 동북아 안보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분석·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統一韓國의 외교·안보정책방향을 강구·제시하였다.

1. 世界秩序: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에서는 승리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침체되어 미국 일국으로는 國際公共財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패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미국은 국제공공재의 분담(burden sharing)을 여타 국가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즉 미국의 조정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간 국제협조 속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국제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 체제에서는 미국의 패권 달성수단으로서 미국 중심의 유엔 등 國際機構가 이용되고 있다.

결국 이 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국가들에 의해 유지되는 패권체제이며, 비용분담국이 비용부담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지 가능한 체제이며, 국가주권을 초월한 국제협조가 달성되는 체제이다. 필자는 이를 「美國 主導의 팍스콘소티아(Pax Consortia) 體制」라고 호칭한다.

한편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에는 국가간의 계층적 구조가 형성되는데, 미국이 조정자·균형자로서 最上端에 위치한다면, 독일·일본·중국·러시아 등 전세계적 차원에서

배타적·우월적인 경제·군사·외교적 역량을 어느 하나라도 보유한 강대국들이 上層部를 형성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비용 분담에 참가할 능력을 가진 중·선진국들이 中間部를 구성하며, 여타 국가들이 下層部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은 종래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층부와 중간부의 국가들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는 국제공공재에 대한 비용분담을 요구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엔 등 國際機構 또는 多者間 協力の 틀을 이용하게 된다. 즉 비용분담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은 단독으로 응징하거나 아니면 여타 국가들과 제휴하여 제어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제도적 장치 속에서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해 費用分擔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응징하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指導力은 국제기구를 통해 발휘되게 된다.

다만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의 문제점은 우선 ①最上端에 위치한 미국이 조정자·균형자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느냐 또는 미국이 비용분담을 통하여 경제를 회복하고 재차 패권국가로 재등장할 수 있느냐이며, ②上層部를 형성하는 국가들이 점차 미국의 조정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패권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③中間部 국가들이 이 과정 속에서 최상단 미국과 상층부 국가들간의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재편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는 唯一 超強大國으로서 미국이 국제관계의 각 분야에 관한 관련국들의 상호 이해를 조정하면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형태이나, 이는 사실상 불완전한 安定으로서 궁극적으로 다른 형태의 霸權體制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다만 현재처럼 명백한 패권후보국이 없고, 특히 上層部 國家들의 이해관계가 현 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한, 단기간내에 새로운 패권이 출현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2. 東北亞의 팍스콘소티아: 1+3 체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新國際秩序에는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상호대립·교차하고 있으며 이는 域內的 정치·군사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美國이 唯一 超強大國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고,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와 함께 역내 세력 균형을 이루는 방향, 즉 미국이 均衡者的 역할을 수행하고 日·中·러가 勢力均衡을 이루는 「1+3 體制」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동북아의 팍스콘소티아 體制이다.

이와 같은 「1+3 體制」는 전술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즉 미국이 最上端에 위치하고,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가 上層部를 형성하고, 그리고 남북한이 中間部를 구성하는 특수한 지역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형성될 「1+3 體制」는 전세계적 차원의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와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남북한 만이 중간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남북한을 둘러싼 上層部 國家들의 영향력 경쟁이 매우 첨예한 對立的 樣相을 보이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協調的 樣相을 보이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과의 관계가 상충부 국가간의 勢力均衡을 좌우하는 하나의 척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을 둘러싼 상충부 국가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對立的 樣相을 보이게 된다.

둘째, 다만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는 본질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國際協調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上層部 國家間的 대립은 표면화될 수 없으며, 적합한 국력을 신장할 수 있을 때까지 대립을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립을 노골화시킬 수도 있을 요인의 발생에 대해서는 공동 협조하에 저지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갈등과 전쟁재발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상충부 국가들 모두가 반대하게 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협조하게 된다.

셋째, 이상과 같이 남북한을 둘러싼 上層部 國家들의 관계

가 대립과 협조라는 二重의 性格을 띠기 때문에, 最上端의 미국은 남북한이 상층부 국가들간의 균형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남북한을 직접 관리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상과 같은 동북아 지역구조의 특수성은 최근 北韓 核問題 展開過程에서 잘 노정되었다. 즉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동조하면서도, 일본은 남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중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 미국은 대북한 수교를 통해 북한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 이상과 같은 「1+3 체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팩스콘소티아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多者間 協議機構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는 사실상 역내 국가들을 포괄하는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 安保와 經濟의 두 측면에서 다자간 협의기구 창설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협의기구 창설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 주도의 팩스콘소티아 체제」의 작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영토·국경분쟁 및 군비경쟁 등 안보위협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3. 統一韓國의 등장에 따른 域內 力學關係

「1+3 체제」하에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최상단의 美國은 일·중·러의 세력 강화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통일한국의 국력 증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일·중·러 등 上層部 國家들도 통일한국 자체가 강대국화 또는 패권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보다는 통일한국이 타국과 연계 제휴함으로써 빚어지게 될 자국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통일한국이 국력신장의 호기를 맞이하여 상층부 국가로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국력쇠퇴와 일·중의 국력신장 등의 요인에 의해 「1+3 체제」가 아니라 미·일·중·러의 4角均衡體制下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통일한국이 국력을 신장하여 미·일·중·러간의 기존 세력균형체제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능성을 경계할 것인 바, 통일한국의 上層部國家 進入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4각균형체제가 형성될 경우에는 한반도 통일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세력균형체제는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하고, 이에 따라 불확실한 현상변경을 초래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4각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에 따라 4각간의 암묵적 합의로 分斷 固着化政策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한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강대국에 비견할 만한 국력을 구비하게 된다. 즉 남북한을 현재 수준에서 통합하더라도 통일한국은 상당한 국력을 보유하여 세계 188개국 중 통일된 한국의 면적은 78 위, 인구는 12위, 국민총생산은 11위를 점하게 되며, 군사력도 미·일·중·러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잠재적 군사대국이 된다.

따라서 「1+3 체제」에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상당한 국력을 구비하게 될 통일 한국의 등장은 역내 力學關係의 중대한 變數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주도형 팍스콘소티아체제에서는 최상단의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중·러 등 상층부 국가간에 연합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국제협조를 기축으로 하는 체제이므로 反美 國家群의 형성은 미국 주도하에 공동의 국제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층부 국가들은 상호간의 제휴에 의하기 보다는 중간부 국가와의 연계 또는 하층부 국가에 대한 착취 등 개별적 노력에 의해 국력을 신장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등장에 따라 상층부 국가간의 역학관계는 당해국의 統一韓國과의 關係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4. 통일한국의 外交·安保政策方向

통일이후 한국은 국내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후유증을 최

소화하고 民主化와 經濟發展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 하되, 국제적으로는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신장하여 先進國으로 진입하는 데 국가안보정책의 基本目標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이 동북아 국제안보구조에서 일·중·러 등과 비견할 수 있는 국력을 신장·구비함으로써 동북아지역 내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의 上層部 國家로 진입하여야 할 것이다. 즉 「1+3 체제」의 상층부에 참가함으로써 최상단의 미국과 한·일·중·러의 「1+4 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나아가 한·미·일·중·러의 「5각 균형체제」를 목표로 적극적인 국력신장 정책을 추진한다.

이상과 같은 「1+3 체제 → 1+4 체제 → 5각 균형체제」로의 國家發展을 위해 통일한국은 다음과 같은 政策推進方向을 설정한다.

첫째, 최상단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수행에 협조함으로써 「1+3 체제」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즉 통일한국을 배제한 미·일·중·러의 「4각 균형체제」형성을 방지한다.

둘째, 최상단과 중간부간의 직접관계를 이용하여, 상층부의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상층부로 진입함으로써 「1+4 체제」를 이룩한다.

셋째, 국제정치 무대를 동북아에서 아·태지역으로 확대하여 역학구조내 하층부를 확보함으로써 중간부에 있는 통일한국의 국력신장 및 상층부 진입에 대한 일·중·러의 견제를 최소화하고 상층부 국가간의 세력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國力의 相對的 比較優位를 고려한 對上층부 정책을 추진한다. 즉 일본과의 정치·외교협력, 중국과의 경제협력, 러시아와의 정치·외교·경제협력 등을 중점 모색한다. 특히 일·중의 정치·군사대국화 경향을 견제하고, 상층부 국가 가운데 비교적 국력이 취약한 러시아와의 공동협조방안을 강구·추진한다.

다섯째, 아·태 지역내 다자간 안보·경제협력을 적극 주도·동참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역할을 제고하고, 역내 하층부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추진방향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①대미 협조외교, ②일·중 견제외교, ③대러시아 협조외교, ④아·태 다자간 협력외교 등을 추진한다.

5. 韓國의 考慮事項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통일이전부터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정책추진방향이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입각하여 설정되고, 이에 따라 통일이 실현될 때, 통일한국의 정책방향은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정책추진방향을 「1+3 체제 → 1+4 체제 → 5각 균형체제」로의 國家發展으로 설

정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실상 전제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통일시의 동북아 국제안보구조가 「1+3 체제」라는 점이며, 둘째, 통일한국이 균형자인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조하에 「1+3 체제」에서 「1+4 체제」로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4각 균형체제」가 아니라 통일한국을 포함한 「5각 균형체제」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일·중·러간의 「4각 균형체제」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勢力均衡體制를 손상시키는 現狀變更, 즉 한반도 통일 또는 통일한국의 국력신장·상층부 진입에 대해 4각이 모두 경계·반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4각 균형체제」가 아니라 現狀打破的이고 역학관계가 流動的인 「1+3 체제」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1+3 체제」하에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이 실현될 경우, 통일한국을 포함한 「1+4 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1+3 체제 → 1+4 체제 → 5각 균형체제」로의 國家發展이라는 통일한국의 정책목표는 「1+3 체제 유지·발전 → 한반도 통일 → 1+4 체제 형성 → 5각 균형체제 구축」이라는 형태로 현재의 국가목표와 정책추진방향으로 등치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이 상층부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美國과의 관계 발전이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이러한 대미 정책은 사실상 「1+3 체제」하에서 남북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현재의 대미 정책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급변하고 있는 주변정세 속에서 한국은 中·短期的으로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의 최상단에 위치한 美國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여타 上層部 國家들의 영향력 競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國力을 신장하고 統一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또한 長期的으로는 통일한국이 「미국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의 상층부 국가로 되어 「1+4 체제」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5각 균형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目 次

I. 序 論	1
II. 新國際秩序의 一般的 推移	4
1. 理論的 考察	4
가. 현실주의·제도주의·구조주의	4
나. 霸權理論	10
2. 패권이후 신국제질서에 대한 평가와 전망	13
III. 域內 國家들의 新國際秩序觀과 東北亞·韓半島政策	21
1. 미 國	21
가. 신국제질서관	21
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27
2. 일 本	35
가. 신국제질서관	35
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38
3. 중 國	46
가. 신국제질서관	46
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	50
4. 러시아	59
가. 신국제질서관	59
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68

IV.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 安保構造	75
1. 동북아의 팍스콘소티아: 1+3 체제	75
2.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域內 力學關係 전망	81
V. 統一韓國의 外交·安保政策方向	88
1. 基本方向	88
2. 政策推進方向	90
가. 對美 協調外交	90
나. 日·中 牽制外交	92
다. 對러시아 協調外交	98
라. 아·태 多者間 協力外交	101
VI. 結 論	105
參考文獻	112

圖 表 目 次

〈도표 1〉 美國 主導의 惝스콘소타아 體制의 구조	77
〈도표 2〉 統一韓國 및 周邊國家의 經濟力 비교	82
〈도표 3〉 統一韓國 및 周邊國家의 軍事力 비교	83
〈도표 4〉 統一韓國의 國家目標 및 政策推進方向	88

I. 序 論

소련·동유럽권의 해체로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독일이 통일되었으며, 걸프전 이후 미국은 명실공히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등 현재의 국제정세는 마치 兩次 世界大戰後 戰後 處理過程과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유동적인 大轉換期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 안보환경에도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

즉 동북아 안보환경은 역내 국가간의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른 流動性과 탈냉전적 요소와 냉전적 요소가 병존하고 있는 二重性으로 인해 「안정과 불안정」 측면을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차원의 국제관계는 전세계적 차원의 국제질서를 결국 반영하는 형태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 안보환경을 분석함에 있어, 동북아 안보환경에 내재하는 關聯變數들 간의 복잡한 連繫關係를 주목하여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국제질서 변화의 명확한 모습을 분석한 바탕 위에 이것이 동북아지역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살피는 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통일한국의 등장에 따른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방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통일시점의 불확정성과 동북아 각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역내 국

가간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화·유동화될 수 밖에 없고, 이중성의 측면에서도 남북분단이라는 냉전적 요소의 소멸이 역내 탈냉전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현재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모습을 명확하게 상정하기 어렵거니와, 한반도 통일시 형성될 동북아 안보구조를 추론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대외안보환경을 분석함에 있어서 理論的 接近方法을 택하였다.

즉 한반도 통일 시점, 주변국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 등의 제반 변수를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변수는 논외로 하고, 국제정세 변동과정에 대한 一般理論的 接近을 통하여 동북아 정세의 전반적 변화양상을 추론할 것이며, 이에 대한 통일한국의 대외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국제정치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할 것인 바, 우선 제2장에서 現實主義·制度主義·構造主義 등 국제정치이론을 살피고, 이를 종합한 바탕위에 패권이후 신국제질서를 평가 전망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패권이론을 현실주의·제도주의·구조주의적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현재의 추세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새롭게 재구성된 패권이론에 맞추어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미·일·중·러 등 역내 국가들의 외교·안보정책을 新國際秩序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으로 대별하여 분석·전망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동북 아지역 정세와 구조를 분석하는 동시에, 통일한국의 등장에 따른 역내 구조 변화를 연구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대외정책방향을 강구·제시한다.

II. 新國際秩序의 一般的 推移

1. 理論的 考察

패권체제의 형성과 소멸을 논의하고 있는 霸權理論은 일반적으로 現實主義的 觀點에서 고찰된 것이다. 실제로 현실주의는 패권시기의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는데에는 유용하지만 패권이후의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실성을 갖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 이런 점에서 냉전시대의 미·소 양극 패권체제가 붕괴된 이후 최근 국제정치학계에서 制度主義的 接近方法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국제정치현상을 분석하는 現實主義와 制度主義 및 構造主義의 세가지 차원에서 패권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권의 생성과 쇠퇴, 그리고 새로운 패권의 형성에 이르는 과정을 다양한 차원에서 이론화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의 구체적인 모습을 분석한다.

가. 현실주의·제도주의·구조주의

일반적으로 국제정치현상에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主體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對立하는 側面(홉스적 세계관)과 共通利益의 양성을 목표로 協力하는 側面(그로티우스적 세계관), 그리고 이러한 主體의 행동을 규정하는 요소로서의 構造的 側面(맑스적 세계관)이라는 3가지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國際政治理論이란 이들 3가지 국제정치
 의 모습에 착안하여 각각의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구축된 論理의 파라다임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現
 實主義(또는 고전파이론), 制度主義(또는 이상주의), 構造主
 義(또는 맑스주의)로 호칭되는 이론들이다.

예컨대 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동서 양 진영간의 대립과 안
 전보장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上位政治」(high politics)를 다
 루는 현실주의적 연구자들은 제로·섬·게임(zero sum game)
 적 발상에서 국가간의 대립을 강조하였으며, 경제관계를 비
 롯한 「下位政治」(low politics)를 분석하는 제도주의적 연구
 자들은 포지티브·섬·게임(positive sum game)적 발상에서
 국제협조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낙관적이었다. 그리고 맑스
 주의적 연구자들은 냉전의 기원인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체
 제자체의 구조적 모순을 규명하려 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으로의 논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각 이론
 의 논리적 내용과 발전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① 現實主義와 新現實主義

현실주의(realism)는 국제관계가 기본적으로 無政府狀態에
 있기 때문에 행위주체인 주권국가(nation-state)는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경쟁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언제나
 勢力均衡의 發想에 따라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다. 즉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國家中心的 틀로서 파악하고,

국가와 국가간에 행해지는 다양한 대외정책이 만들어내는 對立主義的 側面을 연구의 주안점으로 하며, 국제정치학의 동태적 요인으로서 국가들의 國力이라는 요소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구미를 중심으로 발전한 「핵역지론」과 「분쟁이론」 그리고 「세력균형론」 등이 現實主義에 해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주의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주요 국가간의 「國力の 均衡」(equilibrium of national power)이 이루어질 때 국제체제가 안정된다는 명제에 입각하고 있었으나, 1970년대이후 미·소 패권체제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他國에 비하여 압도적인 국력을 가진 하나의 超強大國의 존재야말로 국제체제의 안정요소라는 논지를 전개하는 新現實主義(neo-realism)로 이행하게 되었다. 즉 新現實主義 입장은 국제체제의 안정요소로서 국력의 균형이라는 對稱性 보다는 타국을 압도하는 강력한 패권국의 존재라는 非對稱性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패권안정론」, 「패권순환론」(장파이론) 등이 주장되었다.¹⁾

1) 대표적인 논저는 세력균형론의 경우,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66); Stanley Hoffmann, *Contemporary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0);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등이며, 패권론의 경우,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George Modelski,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New York: Macmillan Press, 1987)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신현실주의자 가운데에는 신제도주의적 입장을 포함한 논지를 전개하는 시도도 있다. 예컨대 R.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등이다.

②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制度主義(institutionalism)는 국제정치的主體로서 국가 뿐만 아니라 비정부조직(NGO),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등 非國家的 行爲主體를 중시하고, 경제정책과 문화교류 등 非軍事的인 國家間 交流도 국제체제의 동태요인으로 인식하여,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협력(coope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의 측면을 주요한 과제로서 연구하는 입장이다. 즉 제도주의는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에 의한 국제관계의 協力主義的 側面을 연구의 주안점으로 하며, 국제정치의 동태적 요인으로서 특히 經濟的 相互依存과 國際組織의 政治的 調停機能 등의 요소에 착안하는 입장이다.

50~60년대 제도주의 이론은 국제체제의 동태성과 안정을 국제적 조직(기구)을 매개체로 한 경제활동 등의 國際交流의 統括이라는 개념에 따라 분석하여 「국제통합이론」과 「경제통합이론」 등으로 대표되었으나, 점차 경제적 상호의존의 침투에 의한 국제협조활동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 相互依存論과 레짐論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制度主義, 후자는 新制度主義(neo-institutionalism)라고 하며, 특히 國際秩序 등 매우 규범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경우에는 理想主義(idealism) 또는 新理想主義(neo-idealism)로 호칭한다.

제도주의이론에서 국제체제의 안정은 EC 등 지역주의적 국제협력기구의 국제통합활동에 의해 실현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역협력기구들이 침체·무산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상호의존을 기축으로 한 국가간 협조야말로 국제체제를 안정화시킨다는 신제도주의이론으로 진화하였던 것이다.²⁾

③ 구조주의와 신구조주의

국제정치는 국가와 함께 계급, 사회집단, 개인 등 각 주체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가진 이윤확대의 이념과 활동은 국가간에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만들고, 그 때문에 국제관계는 富國의 貧國

2) 대표적인 논저는 국제통합이론의 경우 Ernst B. Haas, *Beyond the Nation-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이고, 경제통합이론은 B. A. Balassa, et al., eds.,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North-Holland, 1975)이다. 한편 상호의존론은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1977), 레짐론은 S.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이 각각 대표하고 있으며, 신제도주의자들은 신현실주의적 논리를 자신의 논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R. O. Keohane, "Theory of World Politics: Structural Realism and Beyond," in A. W. Finifter, ed.,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83); R. O. Keohane, "Theory of World Politics," in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J. G. Ruggie,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n the World Politics: Toward Neorealist Synthesis," in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sis* 등 참조.

에 대한 支配·從屬의 搾取關係로 성립되고 있다는 것이 구조주의적 입장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이론에는 국제체제의 동태성과 안정을 부유한 中心國과 빈곤한 周邊國과의 정치·경제·문화·사회 등의 영역에서의 지배관계라는 개념으로 분석하는 남미 從屬學派와 북유럽의 構造學派의 「종속론」, 중심국과 주변국 및 중심국을 따라잡으려는 준주변국 등 3층 구조와 중심국간의 헤게모니쟁탈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 「世界體制論」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구조주의 (structuralism), 후자는 신구조주의(neo-structuralism)라고 한다.

구조주의이론에서는 국제관계의 중심·주변구조간의 지배 종속관계가 경직된 체제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착취(exploitation)가 정당화되는 논리가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관계는 국제체제 전체의 「변혁」(revolution)에 의해서만 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제3세계 국가들이 自助努力으로 이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조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요소에 대한 과도한 강조, 국제체제 전체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시각의 결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아시아 NIES의 융성 등 從屬 가운데에서의 發展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사례들이 생기면서, 중진국 또는 준주변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고 더욱이 3층구조의 속에서 각 국가가 순환한다는 모델을 제시하는 新構造主義로 진화하였던 것

이다.³⁾

나. 霸權理論

일반적으로 霸權理論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實主義的 觀點에서 성립되고 발전하여 온 이론체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변동하고 있는 신국제질서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석·파악하기 위해 현실주의·제도주의·구조주의 등 국제정치이론의 모든 관점에 입각하여 패권이론을 검토하여 본다.⁴⁾

① 패권성장기

패권성장기는 어떤 국가가 군사·정치·경제·문화·지리·역사·국제관계적인 다양한 요소에 의해 다른 국가에 비해 우월한 國力을 축적하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계를 지도하는 霸權國으로 되어가는 시기이다.

3) 종속론의 대표적 저술은 J. D. Cockloft, A. G. Frank and D. L. Johnson, *Dependence and Underdevelopment: Latin America's Political Economy* (Anchor, 1972); O. Sunkel, "Big Business and Interdependence: A Latin America View," *Foreign Affairs*, vol. 50, no. 3 (April 1972), pp. 517~32; G. Myrdal, *Richlands and Poor: The Road to World Prosperity* (Harper and Row, 1957) 등이며, 세계체제론은 I.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이 대표적이다.

4) 이하에서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이론적 종합은 특히 일본의 신진 국제정치학자 石井貫太郎의 논문을 크게 참고하였다. 石井貫太郎, "ポスト冷戰時代の到來とマクロ國際政治理論の體系化: '新現實主義的總合'としての統一パラダイム構築への道," 日本國際政治學會 編, 「國際政治」, 第106號 (1994年 5月), pp. 46~55.

이 시기의 國際體制은 패권후보국의 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형태와 방향으로 유동화하고, 패권국 이외의 국제체제 구성국가들은 패권국과의 정치·군사·경제적 相互關係의 深度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不均等發展을 하게 된다. 즉 패권국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패권국으로부터의 군사·경제 원조를 통하여 번영·발전할 수 있게 되지만, 패권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한 국가들과 패권체제의 존립에 있어서 중요시되지 않는 지역의 국가들은 패권국의 원조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패권국 및 동맹국가들로부터의 다양한 적대적 압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체제에서는 강력한 국력을 가진 국가들과 취약한 국가라는 국가간 격차가 생기고, 富國과 貧國間의 支配·從屬關係가 생기게 된다. 이런 점에서 構造主義的 論理가 의의를 갖는 것이다.

② 패권충실기

패권충실기는 패권국이 산하의 다른 국제체제 구성국가들을 통괄하면서 강력한 霸權을 형성한 시기인데,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問題가 패권체제라는 틀 속에서 생성·작동되고 패권국의 국력과 영향력에 의해 처리되는 시기이다. 즉 국제경제문제와 집단안전보장문제 그리고 패권국 산하 구성국들간의 싸움으로서의 국제분쟁문제 등 다양한 國際問題가 사실상 霸權國의 影響圈內에서 발생되고 해결된다. 결국 국제체제는 모든 분야에서 패권국의 국력에 의해 통괄되어 유지된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패권체제의 歪曲 징조도 적으나마 현재화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이 시기에는 현실주의적 논리가 가장 설득력을 갖게 된다.

③ 패권쇠퇴기

패권쇠퇴기는 패권국이 국제체제 안정화를 위해 자기 국력을 사용함으로써 人的·物的 資源을 낭비하고 경제활동의 生産性을 둔화시켜 技術革新 能力도 감퇴하게 되고, 그 때문에 다른 강력한 라이벌들의 발흥에 의해 패권국으로서의 地位를 위협받게 되는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군사적 수단의 행사 또는 경제지원으로 대표되는 實質費用의 증대를 절약하기 위해 패권국의 政治的 發言이 강력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바꿔 말하자면, 패권충실기에 패권국은 세계 도처에 派兵 能力을 갖고 있었으나, 점차 국력이 여러 요인에 의해 감퇴하게 되면, 패권국이 자기의 패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스스로의 비용 부담의 정도를 줄이고, 그것을 정치적 압력을 통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分擔(burden sharing)시킨다. 즉 정치적 발언력의 강화라는 형태로 패권력 행사의 수법에 있어서 政策의 轉換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각국은 패권국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비용부담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국제체제는 서서히 불안정한 요소를 현재화하면서, 패권지배로부터 이탈을 구하는 分離主義와 패권이후 시대의 질서를 구하는 統合主義의

동향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된다. 이에 따라 지배력으로서의 패권국의 국력은 점차 감퇴하여, 패권체제는 一元的支配로부터 多元的支配로 변화되어 간다. 따라서 국제체제는 國際協調活動을 통해 운영되게 되며, 이런 점에서 이 시기에는 制度主義的 論理가 의의를 갖게 된다.

④ 패권이행기

패권이행기는 패권국의 실질적 힘의 저하가 결정적인 것으로 되어, 강력한 라이벌 국가와의 패권전쟁 등 변동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霸權支配에 의한 秩序로 대체되어가는 시기이다. 결국 이 시기에서는 전술한 패권성장기와 쇠퇴기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즉 舊패권체제의 잔존요소로서 國際協調活動이라는 차원과 새로운 패권체제의 융성에 따라 수반되는 요소로서 國家間 隔差의 生成이라는 차원이 동시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시기 국제관계의 특징이다. 바꿔말하자면, 전자는 統合의 요소이며, 후자는 分離의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에는 構造主義的 및 制度主義的 論理가 의의를 갖게 된다.

2. 패권이후 신국제질서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하고 미국은 단기간에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 單極의 霸權體制를 확립하였

다. 그러나 1949년 9월 소련이 原爆 實驗에 성공하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방 진영으로 나뉘어져 세계 체제는 兩極化하였다. 냉전체제에서 미국은 서방 진영에서 패권 유지를 위한 일방적인 國際公共財의 공급자였으며, 소련은 동방 진영에서 마찬가지로의 패권자였다.

그러나 미·소는 첫째 패권경쟁 때문에, 그리고 둘째, 세계적 규모로 확산된 과잉개입에 따른 제국유지비용의 팽대화로 인해 國力이 저하하여 미·소 쌍방의 패권체제의 기능이 저하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71년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전후 국제경제의 틀을 구성하고 있던 브레튼·우드체제가 붕괴하면서 서방 진영에서 미국의 패권체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하여야만 하는 미국으로서는 공산주의로부터 세계를 지킨다는 大義를 내걸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였다.

부시政權 초기인 1989년 11월 동·서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이 제거되고 동유럽국가들이 차례로 민주화되어 동·서 냉전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걸프만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은 즉각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자산 동결과 무역 중단을 위해 부대와 장비를 걸프만 지역에 전개하는 동시에, 유엔을 중심으로 對 이라크 포위망을 구축하였다. 그 후 1991년 1월 다국적군의

공격이 개시되어, 2월에는 다국적군의 압도적 승리로 정전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마침내 1990년 10월 동서독이 통일되고, 1991년 3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었다. 더욱이 1991년 12월 소련방의 해체로 동서냉전은 종언하고 국제정치·경제·군사적 대지각변동이 초래되었으며, 세계는 역사적 전환기 특유의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양극 패권체제와 냉전 종결이후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를 두고, 대체로 미국 중심의 單極體制와 多極體制가 대비되고 있다.

단극체제(unipolarity)란 양극체제의 종식으로 팩스 아메리카나가 퇴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현되었으며, 오직 미국만이 군사력·경제력·이념을 포함하여 중요한 모든 국가적 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의 덕택으로 미국만이 전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單極體制論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必然性·當爲性으로서 독일·일본 등이 경제대국이지만, 미국과 비견될 만한 군사·이념·외교·정치·경제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범세계적 역량(global reach)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과 일본 등이 미국에 필적할 수 있게 되면 다극체제 또는 다른 단극체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런 상황은 한 세대 이후에나 가능할 것인 바, 현재로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체제 수립이 당연하며, 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둘째, 必要性으로서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단극 패권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미국의 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세계지도자 의식 만이 세계를 불안정으로부터 지킬 수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特殊性으로서 가령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하여도 미국은 향후 수십년동안 세계안보 및 경제분야에서 계속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독일과 일본이 경제적 이유와 국제적 거부감으로 세계의 주도적 지위를 당장 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多極體制(multipolarity)는 양극체제가 붕괴한 현재 미국의 국력도 쇠퇴하고 있어 단극체제를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따라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패권국의 그늘아래 안보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성장에 투자하여 온 이른바 「무임승차」 국가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세계체제는 필연적으로 다극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⁵⁾

현재 다극체제를 전망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가는 獨逸과 日本이다. 독일과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5) 패권체제에 대한 위협은 「무임승차」 뿐만 아니라, 최근 헌팅톤에 의해 주장된 文明衝突에 기인하는 바도 클 것이다.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pp. 22~49.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점차 정치·외교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구비할 것이다.⁶⁾

미국은 분명히 현재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제국의 유혹」(imperial temptation)을 받고 있을 것이다.⁷⁾ 그러나 실제로 패권이론이 보여주듯이 양극 패권이 와해된 지금, 미국 주도하의 단일패권이 구축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앞서 설명한 패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배경으로 살펴볼 때, 현재 국제정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히 패권쇠퇴기에 해당한다.

즉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에서는 승리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피폐하여 미국 일국으로는 國際公共財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패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미국은 국제공공재의 분담(burden sharing)을 여타 국가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의 조정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간 국제협조 속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국제체제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체제에서는 미국이 패권 달성의 수단으로서 미국 중심의 유엔 등 國際機構가 이용되고 있다.

결국 이 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국가들

6) Kenneth N.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Fall 1993), pp. 44~79.

7) Robert W. Tucker and David C. Hendrickson, *The Imperial Temptation* (New York: Council on a Foreign Relations Press, 1992).

에 의해 유지되는 패권체제이며, 비용분담국이 비용부담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지 가능한 체제이며, 국가주권을 초월한 국제협조가 달성되는 체제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美國 主導의 팩스콘소티아(Pax Consortia) 體制」라고 부르고 싶다.

무릇 霸權에 의한 세계체제의 안정이라는 구상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국을 압도할 수 있는 탁월한 초강대국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권체제 하에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으며,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체제를 채택하고 패권국은 무역·금융·해양 등 제반 특정문제영역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형성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을 형성·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타국을 군사적·경제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탁월한 국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세계체제를 패권체제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오히려 패권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는 명백히 패권쇠퇴기인 것이다.

패권체제가 붕괴한 지금은 국제질서와 안정이 패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레짐의 유지에 의해 도모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패권이 상실한 세계에서도 레짐의 유지에 의해 국제질서의 안정이 도모될 수 있다고 코헤인(Robert Keohane)이 논하였듯이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파워가 쇠퇴하고 있으나, 국제협조가 붕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쇠퇴후에도 이미 확

립된 국제체제를 축으로 국제협조를 통해 패권에 의해 형성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⁸⁾

한편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에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갈통(Johan Galtung)이 각국간에 분업관계가 성립하여 국가간에 階層的 構造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고 논하였듯이,⁹⁾ 미국이 조정자·균형자로서 最上端에 위치한다면, 독일·일본·중국·러시아 등 전세계적 차원에서 배타적·우월적 경제·군사·외교적 역량을 어느 하나라도 보유한 강대국들이 上層部를 형성할 것이며, 체제유지를 위한 비용분담에 참가할 능력을 가진 중 선진국·중진국들이 中間部를 구성하고, 여타 국가들이 下層部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은 종래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층부와 중간부의 국가들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는 국제공공재에 대한 비용분담을 요구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엔 등 國際機構의 틀을 이용하게 된다. 즉 비용분담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은 단독으로 응징하거나 아니면 여타 국가들과 제휴하여 제어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제도적 장치 속에서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해 費用分擔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응징하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指導力은

8) Robert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9)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8, No. 2 (1971), pp. 81~98.

국제기구를 통해 발휘되게 된다.

다만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最上端에 위치한 미국이 조정자·균형자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느냐 또는 미국이 비용분담을 통하여 경제를 회복하고 재차 패권국가로 재등장할 수 있느냐이다.

둘째, 上層部를 형성하는 국가들이 점차 미국의 조정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패권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中間部 국가들이 이 과정 속에서 최상단 미국과 상층부 국가들간의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역학관계 변동의 중심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는 唯一 超強大國으로서 미국이 국제관계의 각 분야에 관한 관련국들의 상호 이해를 조정하면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형태이나, 이는 사실상 불완전한 安定으로서 궁극적으로 다른 형태의 霸權體制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다만 현재처럼 명백한 패권후보국이 없고, 특히 上層部 國家들의 이해관계가 현 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한, 단기간내에 새로운 패권이 출현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III. 域內 國家들의 新國際秩序觀과 東北亞·韓半島政策

1. 미 국

가. 신국제질서관

냉전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論爭이 현재 미국내에서 거듭되고 있는데, 소련이 붕괴한 시점에서 미국은 自國의 國益 만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몬로 주의」派도 나타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새로운 형태의 霸權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더욱이 어떤 형태로 霸權을 재구축할 것인가에 따라,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연장선상에서 「단극」(Unipolarity)派와 「팍스 콘소티아」(Pax Consortia)派로 나뉘어지고 있다.¹⁰⁾

「단극」과는 소련 붕괴후의 세계에서 미국 만이 유일한 초강대국이므로 미국은 一國으로 패국을 재구축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부시 정권의 정책입안에 영향을 미쳤던 찰스 크라우사머(Charles Krauthammer) 등 新保守主義(neo-conservatism)의 주장으로서,¹¹⁾ 특히 크라우사머는 미국이 초강

10) 牛田久美, “ポスト冷戰時代における米國の對外戰略,” 「新防衛論集」, 第21卷 第1號 (1993年 6月), p. 94.

11) 新保守主義者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인종평등과 복지정책에 절망하여 진보주의로부터 보수주의진영으로 가담하였던 사람들이다. 유토피아 사상을 배제하고 시장경제 지지, 종교와 지역공동체 중시 등 傳統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여야 하고 霸權體制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¹²⁾

한편 「팍스 콘소티아」派는 미국 주도에 의한 共同管理 또는 國際協調에 의해 세계질서 형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주로 미국과 EC, 일본 등 3極이 세계질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發想은 부시정권 말기에 제임스 베이커 前 국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¹³⁾ 현재 클린턴 정권의 세계전략도 대체로 이 構想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 시도가 유엔이라는 하위체제를 활용한 형태의 걸프戰으로서 그 맹아는 한국전쟁에서도 보여졌다.

아뭇튼 냉전 종결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정세는 마치 兩次 世界大戰後 戰後處理過程과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유동적인 전환기이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3월 걸프전에서 승리한 부시 美대통령은 미상하원

的 保守主義와 유사하나, 한편으로 복지사회와 「큰 정부」에 강력히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다르다.

- 12) Charles Krauthammer,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Vol. 69, No. 5 (Winter 1990/91).
- 13) James A. Baker,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 14) 월포비츠 교수는 냉전종결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정치상황을 양차대전 종결후의 상황과 대치시켜, 클린턴, 트루만, 하딩 정권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있는 바, 현재 클린턴 행정부가 직면한 課題를 ①쌍둥이 적자 해소 등 국내경제의 재건, ②미국 주도의 신국제질서 형성과 유지 등으로 대별하여 분석하고 있다. Paul D. Wolfowitz, "Clinton's First Year," *Foreign Affairs*, Vol. 73, No. 1 (January/February 1994).

특별합동회의에서 新世界秩序의 탄생을 선언하면서, 「사막의 폭풍작전」(operation Desert Storm)이야말로 新世界秩序의 시작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 미국이 구상하는 있는 신세계질서의 모습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 미국이 세계의 領首이며 등대로 되는 구상이다. 미국은 소련·동유럽의 해체와 걸프전 승리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으며 당연히 세계의 영수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독일 통일과 동유럽의 자유화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지도력 때문이며, 걸프전은 어느 누구도 미국의 지도력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계의 모든 국가중 미국만이 도덕적인 명성과 이를 유지할 手段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평화수호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언급하였다. 전 국방장관 체니는 미국의 새로운 방위전략은 신국제질서를 향해 매진하는 것이며,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력을 결정하는 요인중 軍事力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바드 대학의 나이 교수는 「미국쇠퇴론」에 반대하면서, 걸프위기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소련이 몰락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고, 유럽은 단결력이 약하고, 일본은 단지 경제분야에서만 대국인 상황에서 美國만이 막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력과 이에 기초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둘째, 미국의 주도하에 새로운 集團安保體制와 동반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유엔 및 기타 國際機構와 地域組織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 미국지도자들은 일본과 서유럽 동맹국, 심지어 러시아와의 동반자관계를 부단히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新國際秩序 형성과정에서 집단안보체제를 여전히 중시하고, 또한 우호국가들과의 동맹·동반자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세계정세가 대대적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동맹국관계 및 집단안보체제를 정세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이는 협상·합작 및 집단행동, 특히 국제조직과 지역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경비·의무의 分擔原則에 입각한 同伴者關係에 기초한 것이다. 걸프전에서 미국은 다국적군을 조직·지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일본·독일·쿠웨이트가 대부분의 전쟁 경비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실현했다. 앞으로도 미국은 신국제질서 또는 신지역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負擔을 절감(burden sharing)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역 및 국가들과 同伴者關係를 맺고자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유럽에서 NATO가 유럽의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유럽공동체(EC), 유럽연합(EU)이 NATO를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걸프지역과 중동에서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체제 수립을 바라

고 있다.

한편 미·소관계, 동서관계의 변화에 따라 국제정치에서 국가간의 공동관심사가 증대되었으며, 미국은 UN이 과거와 같이 제3세계 국가들의 수적 횡포나 미·소 경쟁으로 인한 거부권 행사 등 對決에서 벗어났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에서의 역할 증대를 통해 미국의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세계적 차원에서 西方의 價値觀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자유·인권·사유제·시장경제·의회선거·다당제 등 서방의 가치관이 신국제질서의 지침·기초이며 유일한 정책방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과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사회주의국가들의 혁명 수출을 우려했으며, 사실 1970년대 이후 소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제3세계국가들은 非資本主義 發展路線을 채택하였으나, 현재 미국은 미국의 가치관을 인류의 공통된 원칙과 가치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①소련·동유럽이 자유·민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②1990년 11월 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에서 통과된 「신유럽파리헌장」이 서방의 가치관을 전유럽의 가치관으로 확립시켰고, ③사회주의가 전세계에서 이미 설득력을 상실하였으며,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서방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넷째, 신지역질서를 수립하여 地域紛爭을 억제하고 필요시

무력을 통해 미국의 대외이익을 수호한다는 것이다. 양극체제하에서 초강대국간의 勢力競爭은 많은 지역의 긴장과 충돌, 심지어 전쟁의 주요 원인이었다. 동서 냉전의 종결에 따라 일부 지역분쟁이 정치적 해결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동시에, 어떤 지역에서는 새로운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지역의 안정이 미국의 국익 수호 및 신국제질서 수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와 같은 미국 주도하의 신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制約要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양극체제가 붕괴된 이후 單極體制가 부상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특히 중국과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 단독의 唯一霸權體制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현재 유일패권의 重任을 담당할 역량이 없다.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미국의 국제경쟁력과 경제적 지위는 하락되었다.

셋째, 현재 세계에는 첨예한 모순·대립이 존재한다. 군사·정치·경제는 물론 국가간·지역간에도 복잡한 대립요인이 있다.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의 각종 문제를 모두 처리할 수는 없다.

넷째, 유럽과 일본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수준은 미국을 이미 초월했거나 근접하고 있으며, 국제정치무대에서의 發言權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유럽의 미국·유럽·

일본 3극체제 주장과 미국의 단극체제 주장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美·日·中·蘇의 이해가 교차되어 온 동북아지역이 세계적 안정과 미국의 지속적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¹⁵⁾ 對蘇封鎖와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의 일본 편입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세력균형 유지를 死活的 利益으로 간주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 지역에서 美本土 보호, 전세계적 억지정책 지원,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접근 확보, 역내 세력균형 유지, 역내국가들의 對西方性向 강화, 역내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核擴散 방지, 航海의 자유 확보 등을 국가이익으로 설정하고 있다.¹⁶⁾

미국은 이러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역내국가와의 쌍무 軍事同盟體制 유지, 해외기지 확보 그리고 前進配置를 기조로 한 東아시아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탈냉전 등 전세계적 차원의 安保環境의 변화 및 재정·무역적자 등 국내

15)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U. S. Senate, by General Louis Menetrey, Commander of U. 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 C., February 8, 1990, i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4, no. 1 (Spring 1990), p. 198.

16) U. 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 8.

경제적 요인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封鎖政策을 지역적 또는 小지역적 안보전략으로 대체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 개입을 위한 안보전략 및 정책의 명분도 변화하게 되었다.

1990년 4월 美國방부의 議會 報告書 「21세기 아·태전략개요」를 통해 발표된 아·태 정책조정 의 핵심 내용은 향후에도 域內국가들과의 기존 쌍무동맹체제와 前進배치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지만, 안보환경 변화와 예산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域內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軍事力 構造를 축소 조정하고, 한국·일본 등 域內 同盟國들의 防衛分擔(defense burden sharing)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¹⁷⁾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①과거 대소봉쇄 일변도 정책에서 대러시아 警戒政策으로의 전환, ②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를 통한 일본 견제, ③중국 정치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④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기본적인 政策目標로 설정하고,¹⁸⁾ 「域內 均衡者」 역할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¹⁹⁾ 즉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기존 군사동맹체제 유지, 군사력의 前進配置, 전략핵 중심의 核雨傘政策

17) Ibid., pp. 10~17.

18) 민족통일연구원,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114~121 참조.

19) U. 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 12.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기존정책의 골격을 유지할 것이나, 費用節減 차원에서 그 규모와 운영방식을 대내외적 여건에 맞게 다음과 같이 조정한 것이다.

첫째, 미국은 대규모 美軍駐屯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전진 배치전략의 수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태지역의 점증하는 경제적 중요성과 불확실성을 근거로 주둔병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前進配置戰略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우선 아·태지역이 北美 및 유럽과 함께 國際政治·經濟의 中心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아·태지역과의 이해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死活的 重要性을 지닌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²⁰⁾ 따라서 미국은 전진배치전략에 의한 軍事力 維持를 통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

20) 아·태지역의 經濟的 重要性을 강조한 저작에 대해서는 U. 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 1; Statement by Richard H. Solomo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n the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6, 1991, p. 2; U. 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0*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p. 806~809; Yutaka Akio, "The Soviet Union's Asia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Jap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1 (Spring/Summer 1991), pp. 42~43;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U. S. Senate, by Gen. Louis Menetrey, Commander of U. 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 C., February 8, 1990, i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4, No. 1 (Spring 1990), p. 198 참조.

보호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향후 중·러·북한·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정치적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추세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노력도 이 지역의 安定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등 향후 10년을 轉換期로 평가하고 있다.²¹⁾ 이와 함께 미국은 구소련 만이 미국의 유일한 안보위협은 아니며 미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²²⁾ 따라서 미국은 비록 초강대국간의 대결 가능성이 감소되었다라도 기존의 前進配置戰略이 추구해 온 地域均衡者, 良心的 仲裁者, 그리고 궁극적인 安全保障者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²³⁾ 미국은 다만 안보환경 변화와 예산상의 제약을 감안하여 역내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00년까지 3단계에 걸친 減縮을 계획하고 있다.²⁴⁾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1992년 7월 미 국방부의 의회 보고서 「아·태전략개요」

21) U. 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p. 4~5.

22) Carl W. Ford, Jr., "The U. S. Future in Asia,"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 No. 2 (Winter 1990), p. 209.

23) U. 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 1.

24) *Ibid.*, pp. 10~11. 그러나 이 계획은 제1단계에서만 감축규모를 확정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제2, 3단계 감축계획은 각 단계의 말기의 안보상황을 검토하여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전면 再調整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서도 재확인되고 있으며,²⁵⁾ 1993년 7월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발표한 「新태평양 공동체」 구상에도 잘 나타나 있다.²⁶⁾

둘째, 미국은 전진배치 병력감축으로 생길 수 있는 전력상의 공백을 보충하는 동시에 미국내 국방예산 감축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의 費用分擔 및 役割分擔 확대를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費用分擔 측면에서 한·일에 대하여 동북아에 전진배치된 군사력 유지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役割分擔 측면에서는 동맹체제내에서 동맹국의 역할 증대 및 방위능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²⁷⁾

셋째, 미국은 核武器體系를 전략핵, 기동성 위주의 전술

25) U. 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Report (A Report to Congress)*, July 1992, pp. 20~21.

26) U. S. President Bill Clinton's Address to the National Assembly, July 10, 1993.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의 안보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이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안보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역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美軍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7) 예컨대 미국은 한국방위에 있어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군은 지원역할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한국군이 수행가능한 미군의 任務 및 作戰統制權을 점진적으로 한국에 이양하는 등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는 自衛隊의 1,000海里 방위능력 증강 및 PKO 파병을 통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U. 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p. 15~18; Baker, III, "America in Asia," p. 10.

핵, 전략방위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전진배치군사력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그 구조를 가능한 한 機動軍 중심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軍事力 改編作業은 미국이 향후에도 국제정세를 주도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동북아에서 기존 동맹체제와 전진배치전략, 그리고 일정 수준의 전략핵 및 공군용 전술핵에 근간을 둔 核抑止戰略을 유지함으로써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를 견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域內均衡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對韓半島 政策은 한국전쟁이후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분쟁 발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韓·美 쌍무동맹체제와 전진배치전략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다.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미국의 재정적자 누증에서 비롯된 國防費 削減壓力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반도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기존정책의 근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政策調整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韓·美 同盟關係가 미국의 동북아정책에서 根幹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바, 한국에 대한 安保介入을 축소하기보다는 最適費用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防衛費 分擔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²⁸⁾

둘째, 미국의 대한반도 前進配置戰略 調整은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1990년 4월 발표된 「21세기 아·태전략개요」 보고서에서 駐韓美軍 3段階 減縮計劃을 발표하였으나,²⁹⁾ 이는 부분적 감축에 불과할 뿐 전면적 철수가 아님을 강조해 왔다. 이 계획에 따라 1단계 감축이 완료되었지만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부각된 1991년 후반이후 감축계획을 사실상 동결하고 있으며, 최근 1994년 10월 미·북한 제3단계 고위급회담 타결에도 불구하고 2단계 감축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 핵문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타결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을 상당 정도로 감축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이 1개 사단 규모이하로 감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미국은 韓半島 統一이후에도 상당 수준의 주한미군을

28) 미국은 주한미군의 年間 維持費用 가운데 원貨로 지불되는 부분 중 한국 정부의 부담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본의 부담수준인 73% 수준까지 증액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Statement by Richard H. Solomo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n the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6, 1991, pp. 9 ~10. 한국의 防衛費 分擔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①미군주둔비용 분담 확대, ②대외적인 군사역할 증대를 목표로 한 한국의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 ③한·미·일간 「차세대전투기사업」에서 확인되는 美군수산업과 연계한 한국 군사력의 현대화 추진 등 3次元으로 전개되고 있다.

29) U. 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 p . 15 ~17 .

유지하여 동북아에서의 균형자 역할 및 영향력 유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은 한국군의 역할 강화, 주한미군의 구조 및 역할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작전통제권 및 휴전협정 관리 역할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등 駐韓美軍의 役割調整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정책」과 「핵우산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즉 미국은 남북한이 核武器는 물론 核再處理施設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비핵화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³⁰⁾ 핵보유국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한 대처 등 한국의 安全保障을 위해서는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對北韓政策의 當面目標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지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政策方向은 크게 세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억제 및 북한의 군사능력 약화를 목표로 다양한 군사 정치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둘째,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억지하며, 셋째, 동북아 주요 국가의 대북한정책을 조정하고 이들과의 共同步調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多者主義的 이니셔티브를 취한다는 것이다.

30) 부시 미대통령은 1991년 9월 27일 포괄적인 戰術核 廢棄宣言을 하였는 바, 1950년대 후반부터 배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온 한반도의 전술핵에 대한 의혹도 이로써 해소되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있어 중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이것이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동북아에 있어서 주요 安保懸案으로 상정하고 있다.

2. 일 본

가. 신국제질서관

미·소 양극체제의 붕괴는 일본의 政治大國化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의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자국이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국제질서의 한 軸을 장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신국제질서관은 곧 일본이 政治大國이 되는 청사진이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은 서방의 가치관에 기초한 미·일·유럽이 주도하는 三極世界를 희구하고 있다. 일본은 향후 신국제질서에서 국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경제·과학기술 등 非軍事的 要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 주도하의 평화나 單極體制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며, 미·일·유럽이 공동 관리하는 三極體制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3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은 피동적인 외교정책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신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이 政治大國化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일본은 신국제질서에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전세계적인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일동맹의 강화를 전제로 強大國外交, 訪問外交를 강화한다. 일본내의 여론은 미·일관계에서의 속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본은 미국이 적어도 당분간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唯一 最強大國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일본이 정치대국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국제적 분쟁 해결에 적극 개입하고 국제안보와 평화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역할을 제고한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문제 해결, 걸프전 등에 적극 개입하고 핵무기, 미사일, 화학무기 제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것 등이다.

셋째, 유엔에서의 지위와 발언권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한다. 특히 일본은 유엔 예산의 11~12%를 담당하면서도 일반 회원국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을 敵國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개정하고, 나아가 安保理 常任理事國에 진출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신국제질서 구상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일본의 신국제질서 구상의 핵심은 富國이 세계를 주도하고 전세계에 서방가치관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간의 일률적 평등, 주권의 상호존중, 내정불간섭에 기초한 신국제질서와 배치된다.

둘째, 일본의 주장과 미국의 구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일본이 霸權國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이 의도하는 미·일 동반자관계도 명백히 미국의 세계전략속에서 독립변수로서의 일본의 역할을 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셋째, 일본의 주장은 중국·러시아 등 대다수 아·태지역 국가들과 다르며, 일본의 정치대국화는 필연적으로 「大東亞共榮圈」 재대두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거부반응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만약 일본이 역내국가들의 우려와 주장을 무시할 경우, 결국 이들 국가들과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은 역내에서조차 정치대국으로 행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넷째, 일본내에서도 일본의 21세기 외교정책방향, 특히 어떠한 형태의 국제대국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國論統一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 특히 헌법개정, 군비증강, 미·일관계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일본내의 합의가 없다.

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은 美·日 동맹하에서의 安保 강화, 資源 및 市場의 안정적 확보를 國家利益으로 하여, ①동북아지역에서 안보역할 증대, ②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견제, ③아·태지역 경제 주도 등과 같은 政策目標을 추구하고 있다.

우선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하에서 안전보장을 모색하면서도 經濟力을 바탕으로 안보역할을 증대함으로써 政治·軍事大國의 지위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오와타(小和田恒) 駐유엔 대사는 1994년 6월 8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안보리 개편 소위원회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 희망을 강력히 표명하였으며, 일본은 「拒否權 없는 常任理事國 地位」 확보를 위하여 유엔회원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더욱 적극화할 것으로 전망된다.³¹⁾ 이에 대해 미국도 6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일본과 독일을 편입시키고, 안보리의 산하기구들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安保理 改編案을 유엔에 공식 제안함으로써 일본에 대하여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지위 부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³²⁾

31) 「朝日新聞」, 1994. 6. 9.

32) 「朝日新聞」, 1993. 7. 1.

일본은 구소련의 동북아지역 군사력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 極東軍事力을 여전히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³³⁾ 한편 일본은 중국과 1972년 외교정상화 및 1978년 平和友好條約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敵對關係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지역안정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도모하여 왔으나, 地域強國으로서의 中國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지나해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³⁴⁾

일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美·日 同盟體制 유지,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현대화,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 ①동북아지역에서의 多元化 現象에 따른 갈등 및 위협가능성 억지, ②일본의 軍備增強에 대한 域內國家들의 우려 불식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관계를

33) 日本防衛廳 編, 「防衛白書 1990」(東京: 防衛廳, 1990), pp. 46, 49; 「防衛白書 1991」, p. 49.

34) 중국은 199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軍現代化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고, 특히 1992년 2월 「領海法」을 제정하여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의 거의 전역을 중국영해로 규정하여 일본이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 온 尖閣列島와 국제적인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南沙諸島 등을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고 영해침범 외국선박을 실력행사로 퇴거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일본의 國益을 위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近藤重克, “冷戰後の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をいかに確保するか,” 「新防衛論集」, 第20卷 第1號 (1992年 6月), pp. 62~72 참조. 한편 일본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고도 첨단기술의 對中國 移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中西輝政, 長谷川慶太郎, 高坂正堯, “90年代日本の防衛構想,” 「Voice」 (1990. 8), p. 131.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일 동맹관계는 미국 군사비의 포괄적 삭감, 해외주둔군의 단계적 철수, 방위분담 확대에 따라 日本이 동북아 역내 안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雙務的 關係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⁵⁾

둘째, 일본은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現代化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4차례에 걸친 防衛計劃을 추진하였으며, 1987년 나카소네 내각은 방위비를 GNP의 1% 「정도」로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GNP의 1% 이내」라는 防衛費 上限線을 철폐하였다.

셋째, 일본은 東北亞地域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영향력 확보를 위해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은 지역방위전략과 해상안보정책,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常任理事國地位를 획득하기 위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걸프전을 계기로 1991년 4월 해상자위대 소속 掃海艇을 중동을 파견한 바 있으며, 1992년 6월

35) 일본은 미국의 「安保無償乘車論」에 대해 駐日美軍 경비의 35~40%를 부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일 관계는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쌍무적인 대등한 관계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世界週報」, 1992年 3月 10日. 한편 1992년 1월 부시 미대통령의 訪日時 미·일 양국정상은 「세계적 동반자 관계」(global partnership)를 기반으로 21세기의 도전에 공동 대응한다는 「東京宣言」을 채택한 바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을 성립시킨 후, 1992년 10월 14일 캄보디아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한 데 이어, 1993년 3월 26일에는 모잠비크 평화유지활동에 일본의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일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실적을 쌓아 나가려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기존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하면서 資源과 市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全方位經濟外交, 미·일 무역마찰 해소, 수출 및 첨단산업 주도의 비교우위 확대, 경제협력의 전략적 이용, 일본 주도의 地域經濟圈 구축 등 포괄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資源과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政經分離原則에 입각한 「전방위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미·일간 貿易不均衡問題를 해소하기 위하여 駐日美軍의 경비 부담 및 대외경제지원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제구조 조정 뿐만 아니라 의회와 연구기관간의 유대 강화 등을 통해 상호불신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³⁶⁾

36) Jimmy Carter and Yasuhiro Nakasone, *Ensuring Alliance in an Unsure World: the U. S.-Japan Global Partnership in the 1990's* (Washington, D. 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1), p. 4.

셋째, 일본은 比較優位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주도정책은 「해외 원자재 수입→생산 수입 대체→수출」의 循環過程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은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면서도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마찰을 해소하는 한편, 첨단기술 투자에 주력함으로써 역내 및 세계 차원에서 比較優位體制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넷째, 일본은 정부원조개발계획(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수립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 經濟支援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이미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제4차 해외원조계획 중기목표를 500억 달러로 책정하여 달성한 바 있으며(1988~1991년간 누계 380억 달러, 1992년 실적 120억 달러), 냉전 종결과 미국과의 「世界的 同伴者關係」에 따른 美·日 役割分擔 및 일본의 政治·安保的 影響力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제5차 중기목표를 제4차보다 50% 증가한 75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³⁷⁾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수출확대에 대한 배려, 미국의 안보 전략 지원, 일본 주도의 경제권 형성에의 대비 등의 필요에서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치·군사대국화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³⁸⁾

37) 「朝日新聞」, 1993. 2. 26.

38) 일본은 1991년 4월 「대의 원조제공의 4가지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외국

다섯째,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추세를 고려하여 일본 주도의 아·태 經濟圈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³⁹⁾ 이를 위해 일본은 ASEAN 및 여타 역내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東北亞政策은 安保次元에서는 美·日 同盟體制가 유지되고,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군사력 증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 모색 노력은 미국의 방위분담 증대 요구, 일본내 新保守主義의 대두, 동북아 지역에서의 軍備競爭 가속화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층 더 고무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①세계적인 군비감축 추세와의 상충, ②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온 舊蘇聯의 몰락, ③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주변국의 軍國主義 부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다.

일본은 국내적으로 「보통국가」를 내세워 정치·군사적 대국

원조계획을 자국의 정치·안보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手段으로 적극 이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원조제공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피원조국의 군사비,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무기 수출과 수입, 둘째, 민주화를 위한 노력, 셋째, 인권과 자유존중, 넷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등이다. Takao Kawakami, "Guidelines for Foreig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2, 1993.

39) 일본의 아·태지역 경제권 형성에 관한 주장은 이미 1960년대부터 제기되고 있었으며, 1966년 고지마(小島)案, 1979년의 오오히라(大平)案 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小島清, 「續·太平洋經濟圈の生成」(東京: 文眞堂, 1990) 참조.

화를 지향하기 위한 新保守主義的 政界再編을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하타 前연립내각을 주도했던 新生黨은 「보통국가론」을 내세워 국제적 역할 증대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북한 핵문제 미해결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구실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有事立法」 논쟁을 유발시키고 「유엔에 의한 보편적 안전보장」 개념 도입 등을 주장함으로써, 지역분쟁에 대한 일본의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을 확대 해석하고, 이에 따른 憲法改正 논의를 유도하고 있다.⁴⁰⁾

비록 무라야마 내각 출범(1994. 6. 29)과 新내각의 평화주의적 외교노선 채택으로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경향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한반도에서도 정치·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 등 정치·안보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政治·軍事的 役割 增大를 통하여 韓半島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對韓半島 政策目標은 ①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 방지, ②일본에 적대적인 정권 수립 저지, ③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보를 통한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이익 도모 등

40) 「讀賣新聞」, 1994. 4. 24; 「朝日新聞」, 1994. 5. 11.

으로 요약될 수 있다.⁴¹⁾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서 「두개의 한국」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安保次元에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하며, 북한이 남한에 대한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潛在的 威脅으로 된다고 인식하여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⁴²⁾ 經濟的 側面에서 일본은 한·일간 무역불균형 및 첨단기술 이전과 관련된 양국간의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긴밀한 經濟關係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90년대에 이르러 冷戰構造의 와해와 한·소 수교, 남북대화 진전 등에 따라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9월 가네마루(金丸信) 前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自民黨·社會黨 代表團의 訪北을 계기로 본격화된 북한과의 修交 交渉은 북한의 核問題, 배상문제, 이은혜문제 등의 현안을 남기고 있다.

41) Jungsuk Youn, "Japanese Attitude toward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 (Spring 1992), p. 33.

42) 日本外務省 編, 「外交青書」(平成 3年版), 第35號, p. 208.

3. 중 국

가. 신국제질서관

1990년대 이후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중국은 기존의 국제질서와 대비되는 신국제질서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신국제질서관과 정책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강조하는 신국제질서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新國際秩序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동유럽의 변혁 및 걸프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신국제질서는 기존의 국제질서와 새로운 국제질서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過渡期的 國際秩序이다.

둘째, 기존 국제질서가 미·소를 두 축으로 한 兩極體制였던 반면, 신국제질서는 多極的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걸프전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중심의 單極體制는 지속되기 어려우며, 경제적 측면에서 미·일·유럽의 三極體制와 정치적 측면에서 미·러·유럽·일본·중국이 五極體制가 형성될 것이다.⁴³⁾

43) 중국은 미국중심의 單極體制가 유지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력 약화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신국제질서에서는 정치·군사력보다는 경제·과학기술적 역량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經濟力 弱화가 미국이 주도하는 單極體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과도기적 국제질서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강대국간의 역량과 관계 변화는 국가간의 새로운 分化·組合을 촉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불안정 요인이 나타날 것이다. 즉 동·서진영의 대립에 따른 정치·군사적 대립이 완화된 반면, 서방진영내의 내부모순과 남북간의 정치·경제적 투쟁이 심화될 것이다.

넷째, 신국제질서가 과도기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불안정 요인들을 안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平和와 發展이라는 세계 각국의 大目標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즉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평화와 발전을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불안정 요인들이 局部的인 緊張·對立을 야기할 수는 있어도 국제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軍事·經濟·科學技術 등의 측면에서 서방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몇십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신국제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신국제질서 속에서의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무시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중국이 강조하는 신국제질서 속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주요 국제사안의 해결, 국가간의 관계조정 과정에서 조화·균형자로서의 역할이다. 특히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내외정책 변화는 세계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고유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어떠한

신국제질서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자신들의 총체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양극체제 해체 이후의 국제질서 속에서 여전히 국제정세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獨立自主外交路線, 平和共存 5個 原則에 기초한 전방위의교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강대국의 霸權主義, 強權政治를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신국제질서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구상하면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현단계의 국제관계가 「差別性」과 「一致性」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은 현 국제사회는 각국의 사회제도, 의식형태, 가치관, 역사배경, 문화전통, 종교신앙이 다양하며 각자의 국익이 상이한(차별성) 동시에, 각국의 상호연계·상호의존이 심화되고 모두가 평화·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일치성)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차별성과 일치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자의 존재를 모두가 인정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일국 또는 몇개의 국가가 세계 각국의 이익을 대체하고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⁴⁴⁾ 이러한 인식에

44) 중국의 兩者의 조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러한 霸權·統治·服從에 바탕을 둔 기존의 強權型 국제질서를 지양하고 獨立·平等·互惠에 바탕을 둔 민주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杜攻 編, 「轉換中的世界格局」(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3), pp. 296~97.

의거하여 중국은 신국제질서가 지향하여야 할 方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大小, 強弱, 貧富를 불문하고 모두가 국제사회의 獨立·自主·平等한 구성원으로서 국제사안의 해결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국가간의 평등은 주권의 평등, 법률적인 평등을 말하며, 강대국의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강대국이 스스로의 지위와 조건에 입각하여 世界平和와 安定을 수호하고 군비축소, 환경보호 등의 측면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세계 각국이 자신들의 國情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社會制度, 의식형태, 경제발전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자신들의 발전방식을 다른 국가에 강요해서는 안되며, 內政不干涉이 신국제질서 수립의 중요한 원칙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각국이 主權과 領土를 상호존중해야 하며 어떠한 구실로도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넷째, 國際紛爭은 對話·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신국제질서는 新經濟秩序를 포함하여야 한다. 경제의 국제화 추세로 인해 각국의 관계에서 경제관계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불공평한 국제경제질서가 반드시 개

선되어야 하며, 호혜평등에 기초한 新國際經濟秩序가 수립되어야 한다.

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新國際秩序 수립과정에서 자국의 고유한 역할과 영역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安保·經濟的 利害關係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신국제질서 수립과정을 미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열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도록 좌시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⁴⁵⁾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①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정세의 평화·안정 구축 및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 ②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全方位外交 추진 거점 확보 등을 기본적인 政策目標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평화

45) 한편 중국은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公正·合理的인 신국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성숙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중국은 유럽이 ①구소련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②政治·經濟的 不均衡(독일통일 이후 英·獨·프의 균형 상실), ③領土紛糾·民族葛藤·宗教對立 심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아·태지역은 ①각종 모순이 양극체제하에서 억제되지 않고 이미 폭발하여 현재 해결추세에 있고, ②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地域紛爭(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카니스탄)을 통해 평화·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對話·協商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陳啓懋, “關於在亞太地區建立政治新秩序的探索,” 『國際問題研究』, 1992年 1期, pp. 3~5 참조.

적인 주변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국제질서의 현상유지라는 소극적인 입장보다 자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에 부합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주변환경을 조성해간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평가된다. 물론 한·중 수교는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의 對남북한 정책 변화라는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對남북한 관계의 균형적인 조정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전세계를 겨냥한 전방위외교 추진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戰略的 意圖가 내재되어 있었다. 즉 중국은 과거 자신들이 세계질서의 변혁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和平演變」에 대한 지나친 위기의식으로 인해 대외정책상 피동·수세적인 자세를 일관했다는 반성과 함께, 향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과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對外政策上의 認識 변화는 중국의 대동북아정책 및 대한반도정책 전반에 민감하게 투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한국 등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經濟交流·協力을 강화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초기 중국은 동북아지역 국가들보다 서방 선진국들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중시하여 왔으나, ①아·태 지역의 경제성장, ②서방 선진국들과의 경제협력 부진, ③6.4

천안문사태 이후 서방의 대중국 경제제재, ④지역별 경제블록화 현상 등의 요인에 따라 역내국가들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하면서 「東北亞經濟協力圈」 형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⁴⁶⁾

한편 중국은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내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차원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①미국·러시아의 독점적인 영향력 억제, ②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 장악, ③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견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政策方向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미·러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 및 군사적 위협 감소 등 동북아의 정세 변화가 자국의 영향력 증대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러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라는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정치·경제·군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약화추세에 있는 미·러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한편, 자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46) 중국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주변국가들의 정치적 관계 완화 이외에 역내 국가들의 역사·문화적인 연관성, 경제적인 상호보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史敏, “九十年代的世界經濟格局和亞太地區的經濟合作,” 「世界經濟」(中國社會科學院 世界經濟與政治研究所), 1990年 10月號, pp. 1~4; 中野謙二, “東北アツア地域の協調と中國の對應,” 「中國研究月報」, 1990年 9月號, pp. 1~7.

미·러의 영향력을 완전히 驅逐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경우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 추세, 미국의 국내경제적 요인 등으로 역내 주둔군 철수를 포함한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戰略的 調整과 軍事力 縮小가 불가피하지만, 해·공군의 기동력 강화를 통해 기존의 군사적 영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하의 동북아 신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⁴⁷⁾ 동북아 신국제질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美國 주도하의 질서 형성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둘째, 韓半島問題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남북한 관계개선 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과거 미·소가 향유하여 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日本의 對韓半島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정유지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의 차원에서 한반도문제 및 대남북한관계를 이끌어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과거 중국이 일·북한, 미·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전제로 韓·中 修交를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를 전격적으로 실현한

47) 陳啓懋, “關於在亞太地區建立政治新秩序的探索,” pp. 1~2 참조.

것도 중국의 이러한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즉 중국은 북한과의 기존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남한과의 政治關係를 정상화함으로써 韓·蘇 修交 이후 北韓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상실한 러시아나 지속적인 관계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核開發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발전을 이루지 못해 온 일본·미국에 비해 한반도문제, 대남북한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셋째, 對日 關係에 있어서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교류·협력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과 東北亞의 地域列強으로서 중·일 양국이 긴밀한 協調體制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중국의 동북아정책 목표에 손상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공동보조 모색 등 日本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소의 정치·군사적 대립 완화와 역내 전략적 동맹관계의 중요성 약화에 따라 미·리의 독점적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고, 특히 정치·군사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즉 중국은 최근의 동북아국제질서 변화추세를 감안할 때, 일본의 政治·軍事的 影響力 확대를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견제요인과 협력요인을 함께 갖고 있는 중·일관계의 양면성

을 이해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가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으로 급속하게 발전될 경우, 중국의 동북아정책목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이 특히 미국과의 협조하에 軍事力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對한반도정책은 중국이 동북아정책에서 설정하고 있는 自國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동북아 신국제질서의 형성이라는 목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즉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동북아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일차적인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여기에는 ①한반도의 安定·現狀維持, ②한국과의 경제교류·협력 강화, ③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선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대한반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중국은 1980년대 이후 한반도문제에 대한 기본

48) 중·일관계의 兩面性은 중국이 일본의 경제역량을 자국의 경제발전에 최대한 활용해야 함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일본도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默認 또는 協調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중·일관계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Gerald Segal, "The Challenges to Chinese Foreign Policy," *Asian Affairs*, vol. XX I, part III (October 1990), pp. 308~9 참조.

인식의 전환, 남한과의 비정치적인 관계증진 및 對南北韓關係의 조정, 한·중 수교 등 일련의 대한반도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한반도의 안정 유지를 대한반도정책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안정 유지는 곧 남북한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대남북한 관계의 균형적 조정, 남북한의 세력균형 실현을 통해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平和的인 對話·協商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 중국은 당사자간의 대화·협상을 통한 남북한 관계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상이한 입장에 대해 어느 일방을 지지하기 보다는 쌍방의 성실한 협상자세를 촉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배제,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인 해소 측면에서 미·일 등 한반도문제 관련국가들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화·협상에 의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남북한 쌍방이 각자의 입지 강화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요구로부터 보다 자유로와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중국은 한국이 제기하는 북한의 改革·開放, 核開發 拋棄에 대한 대북한 압력행사 요청은 물론 이들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일방적인 지지 요구를 회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북한의 정치·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한국의 對北韓 吸收統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중국이 평화적인 대화·협상을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면적인 요인이다.

둘째, 중국은 한국과의 정치관계 정상화, 경제교류·협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對南北韓關係의 均衡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즉 중국은 그동안 조심스럽게 추진해 온 대남북한관계의 현실적·균형적 조정이 한·중수교를 통해 일단락 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한반도의 현상유지, 대한반도 영향력의 극대화를 위한 基本手段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 남한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발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대남북한관계에서의 또 다른 不均衡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미·북한 관계개선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는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남북한관계의 균형 상실을 우려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일종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나, 미·북한 3단계회담에서의 북한 핵문제의 일단락, 미·북한 관계개선의 진척 등을 통해 대남북한관계의 균형이 복원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과의 경제교류·협력 확대는 중국이 한국과의 정치관계를 정상화하기 이전부터 대한반도정책의 중요한 부분

으로 인식해 왔던 문제로서 한·중간 정치관계 발전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경제교류·협력 강화와 관련된 중국의 對韓政策은 한국의 자본·기술 도입과 교역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鄧小平의 「南巡講話」와 14全大會 이후 「보다 빠르고 과감한」 全方位 改革·開放政策과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과거 남부지역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을 확대조정하여 上海·烟臺·靑島·天津·大連·營口 등 중국 동부·渤海灣 연안의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제2의 경제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 특히 대기업의 직접 투자 기술합작 등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1986년 이후 연평균 38%의 급성장을 지속해 온 양국의 교역량은 1993년 약 90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한·중수교 이후 정치적·법적 장애가 해소되면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直接投資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끝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우위 확보는 중국이 기존의 수세적인 입장을 탈피하고 능동적인 全方位外交를 지향하면서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정책 목표이다. 이는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지위 증진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외교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의도

는 우선 韓·蘇修交 이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 우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의 정치·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주변 강대국의 간섭을 견제하면서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 개혁·개방 유도 등의 문제에서는 자신들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4. 러시아

가. 신국제질서관

소련방이 해체되고 구성공화국들이 독립국가로 되면서 러시아의 外交環境이 크게 변화되자, 러시아 외교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신사고」(novoe myshlenie)에 상응하는 새로운 외교이념 또는 「신사고」의 발전형태를 미처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구소련이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CIS)이 형성되었으나, 그것은 구소련과 달리 강력한 中央을 갖지 못한 느슨한 국가간의 결합에 불과하여 地政學的 現實에 있어서 적지않은 변화가 야기되었다. 더욱이 東西冷戰의 終熄에 따라 安全保障觀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국내적으로도 정치 불안정과 경제혼란으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 소련방의 해체로 인한 지정학적 조건의 변화를 살펴 보면, 軍事同盟國이었던 동유럽 국가들과 몽골의 정치체제가 변화되었고, 구 연방 구성공화국들이 독립국가로 되면서 러시아와의 一體性을 상실함으로써 정치·경제·외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의 소지를 안게 되었다. 러시아의 주권영역이 구소련시대에 비하여 훨씬 좁아지게 되었고 국경선을 접하게 되는 국가도 변화하게 되었다.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極東方面을 제외하고는 영토적으로 크게 후퇴하게 된 것이다.⁴⁹⁾ 이에 따라 구소련시대에는 서유럽 및 중국이 접경국가로서 外部的 威脅의 對象이었으며, 동유럽과 몽골 그리고 구소련 구성공화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외부적 위협을 일차적으로 막아주는 防波堤였으나, 이제 그 방과제가 직접적인 접경국가로 되면서 地理的 戰略關係가 변화하게 되어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는 서유럽과 중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과제국가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92년초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군사전문가들은 地政學的 觀點에서 러시아의 국경지역을

49) 서부 방향에서는 종래 NATO와 대치하여 오던 동유럽과 구소련 구성공화국이라는 緩衝地帶를 상실하면서 동서 약 1,400km에 달하는 공간을 잃어,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발트3국,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구성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자카프카지에 지방과 중앙아시아 등 남서부 및 남부 방향에서는 모두 구소련 구성공화국과 접경하게 되었으며, 남동부에서는 과거 구소련의 16번째 공화국으로까지 호칭되던 몽골과 접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구소련시대와 비교할 때 극동지역에서만 종래의 국경선이 유지되고 있다.

西유럽 방면, 南西部 방면, 南部 방면 및 東部 방면으로 4분하고 戰略環境을 논하면서, 특히 독일통일로 인한 서부 방면으로부터의 潛在的 威脅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나,⁵⁰⁾ 구소련 해체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서방에 대한 우려는 비록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으나,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소련시대에는 中國과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도 많았으나,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지야,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국가들과 몽골의 存在에 의해 중국으로부터의 위협도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고르바초프시대의 「新思考」 外交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나, 종래의 고르바초프 외교와는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구소련 해체후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어디로부터 오며, 이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라는 두가지 爭點을 중심으로 論爭이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논쟁은 대체적으로 大西洋主義(Atlantism)와 유라시아主義(Urasianism)라는 두가지 견해로 대별되었다.⁵¹⁾

첫째, 초기의 열친 정권 지도부 특히 외무부의 견해로서 서구사회와의 결합을 중시하는 대서양주의자의 입장이다. 즉 대서양주의자들은 「西」로부터의 위협은 없어졌으며, 과거 敵

50) *Krasnaia zvezda*, May 20, 1992.

51) 大西洋主義는 코지레프 외무장관으로 대표되며, 유라시아主義의 대표는 스탄케비치(Sergei B. Stankebich) 대통령고문이었다. *Nezavisimaia gazeta*, July 8, 1992. 이러한 대립은 大國協調的 外交인가 또는 民族的 外交인가라는 점으로 특징지어진다. *Ibid*, July 25, 1992.

이었던 미국과 NATO는 이제 파트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족분쟁 등에 의한 전쟁의 위협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소련내의 민족분쟁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국제적·지역적 체제에 참가하여야 하며, 구소련내의 분쟁을 일차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제적·지역적 체제의 틀 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역분쟁문제를 國際化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유라시아주의자의 주장으로서 서방과의 협조는 필요하지만 국익을 무시한 협조이어서는 안되며, 러시아는 東의 이해관계도 고려하여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大西洋主義와 유라시아主義 또는 全方位外交論의 대립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 과거 19세기 중반 러시아帝國의 근대화를 둘러싸고 러시아의 知的 生活을 양분하였던 서구파와 슬라브파간 논쟁의 變形에 지나지 않는다.⁵²⁾ 확실히 현재 러시아의 경제적 과국상태를 고려할 때, 러시아의 基本

52) 서구파와 슬라브파간의 외교논쟁에 관한 서방측 평가에 대해서는 Natalie Gross, "Russia's Strategy: East and West?" *Jane's Intelligence Review*, June 1992; Alexander Rahr, "Atlanticists versus Eurasians in Russian Foreign Policy," *RFE/RL Research Report*, May 29, 1992; Vera Tolz, "Russia: Westerners Continue to Challenge National Patriots," *RFE/RL Research Report*, December 11, 1992 참조.

的 利益은 시장경제를 통하여 충분한 富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이며, 對外政策이 어떤 고귀한 목표와 결부되더라도 內政的·經濟的 目標를 우선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곤차로프(S. Goncharov)가 주장하듯이, 러시아에 있어서 일본을 포함한 서방국은 사회·경제발전의 모델이며 협력과 안전보장의 첫째 파트너이므로, 러시아 외교의 「親西歐性」(zapadnaia napravlennost')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外交는 「合理的 예고이즘」이라고 할 수 있어도 결코 「西歐에의 일방적 追從」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⁵³⁾

그러나 러시아의 외교의 「친서구성」을 피할 수 없다고 하여도 러시아외교의 獨自性を 강조하는 비판이 결코 간과될 수는 없었다. 특히 첫째, 미국의 노골적인 이라크 공격으로 예증된 미국의 국익추구외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러시아도 獨自的인 國益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 둘째, 보스니아와 구소련의 민족분쟁에서 예증되었듯이 UN과 CSCE 등 國際機構가 냉전후에도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독자적인 安全保障方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 셋째, 냉전 종결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원조가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서방은 자금 제공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성공적인 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러시아 스스로 중장기적인 自助努力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53) *Izvestiia*, February 25, 1992.

는 인식 등으로 親西方路線의 修正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서는 변화된 외교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을 둘러싼 論爭이 벌어져 왔고, 그것이 결집되어 外交政策指針의 형태로 1992년 12월 공식 문서화되기에 이르렀다.⁵⁴⁾ 이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외정책관은 대체로 냉전후의 새로운 國際社會에 있어서 러시아는 美國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즉 종래의 西方一邊倒 協調路線에서 일정부분 후퇴하여 러시아의 獨自性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西方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서의 主要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러시아 시민의 법적 권리와 생명, 명예와 존엄의 옹호이다.

54) 외교정책 지침에 대한 보고서는 1992년 가을 이래로 초안 형태로 발표되기 시작하여, 1992년 10월 31일 「외교개관」(Diplomatic Panorama)의 이름으로 最終案이 발표되고(*INTERFAX*, November 2, 1992; *FBIS-SOV-92-212*, November 2, 1992, pp. 11~13.), 1992년 11월 23일 최고회의 각파 대표들과의 비공개 회합에서 재차 修正案을 제시(*INTERFAX*, November 23, 1992; *FBIS-SOV-92-227*, November 24, 1992, p. 26.)함으로써 完成本은 12월 1일 공개되었다. *INTERFAX*, December 1, 1993; *FBIS-SOV-92-232*, December 2, 1992, pp. 3~5. 12월 1일 「외교정책문서」는 10월 31일자 「외교개관」에 비해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었고, 특히 CIS 관련부분에 더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었으나, 기본적으로 政策構想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② 러시아 外交의 戰略的 目的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번영된 市民社會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外的 條件을 창출하는데 있다. 따라서 國內改革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제협력·발전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③ 領土保全과 國境不可侵의 原則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④ 外交와 條約에 의한 안전보장의 확보가 가장 필요하며, 국가의 死活的 利益이 위협을 받게 되면, 集團的 또는 獨自的 自衛措置의 강구도 불사한다.

⑤ 합리적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핵무기를 감축하고, 戰略核武器가 러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 構造를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

⑥ 地域紛爭에 대해서는 平和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CIS와 CSCE 및 유엔이 실시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군부대를 파견한다.

이상과 같이 외교정책문서를 분석할 때, 러시아 외교정책의 목표는 첫째, 구소련 각국에 남아있는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 등 「시민의 이익」 옹호, 둘째, 국내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의 확보, 셋째, 핵무기 삭감을 통한 「핵무기가 위협이 되지 않는 構造」 형성 등이며, 러시아는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이 文書에서 나타나 있는 러시아 外交政策의 推進基調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최우선 목표인 「러

시아 시민의 권리, 생명, 명예, 존엄 수호」, 특히 국외거주 러시아系 주민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에의 호소, 경제제재 수단 등을 강구할 것이나, 최종적으로는 유엔헌장의 범위내에서의 군사력 행사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의 시민사회 형성에 最適한 外的 條件 창출」을 위해서는 ①周邊國家 특히 구소련 구성공화국과의 善隣友好關係 발전에 노력하고, ②국내 경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서방의 경제지원이나 투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安全保障政策에서는 核戰略 이외에도 CIS내의 갈등과 분쟁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地域紛爭에 대해 적극적으로 平和創出 역할을 담당하고, CIS와 CSCE 및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유지활동에 군부대를 파견하는 등 러시아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독자적인 자위조치 발동도 불사한다는 것이다.⁵⁵⁾

러시아는 동서냉전의 종식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對立과 國益에 대한 帝國主義的 解釋을 버리고, 모든 국가, 특히 미국, EU 및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 軍事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55) 지역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Suzanne Crow, "Russia Seeks Leadership in Regional Peacekeeping,"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15 (April 4, 1993) 참조.

데 바람직한 기반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어떠한 국가도 敵對視하지 않고, 평화공존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옹호하면서, 각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달성수단으로서 戰爭을 포기하고 러시아의 군사독트린이 防衛的 性格임을 강조하고 있다.⁵⁶⁾

국제관계의 脫이데올로기化에 의해 위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 종래와 같은 양대진영간의 대립이 종식되었고 세계적 규모의 核戰爭과 在來式戰爭이 발발할 직접적인 위협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세계에는 아직도 사회·정치·경제적 모순, 영토, 종교, 민족 및 그밖의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상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모순과 대립이 증폭되어 무력분쟁과 전쟁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矛盾이 適時에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이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안전보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확산, 일부 국가에 의해 악용될지도 모를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 국제테러의 증대를

56) 러시아의 군사독트린에 대한 평가는 *Krasnaia zvezda*, June 22, 1992; *Nezavisimaia gazeta*, July 30, 1992; E. Shaposhnikov, "O kontseptsii bezopasnosti Rossii," *Mezhdunarodnaia zhizn'*, No 1, 1993, s. 5~23; B. Makeev, "Kuril'skaia problema: voennyi aspekt," *Mirovaia ekonomika i mezhdunarodnye otnosheniia*, No 1, 1993, s. 54~59; *Jane's Intelligence Review*, Vol. 4, No. 12 (December 1992), pp. 531~34 참조.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민족주의적·분리주의적 경향의 증대와 일부국가에서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대규모적인 침해가 세계를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구소련 국가들을 포함한 지역의 民族紛爭을 우려하고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정책방향은 이상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러시아가 外交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외교목표와 정책추진기조가 설정된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국가에너지는 國內問題 解決에 집중되고, 외교부분에서는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外的 條件의 창출 차원에서 특히 CIS 국가들과의 관계에 집중될 것이며, 기타 國際關係는 현상유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接境地域으로서 동북아지역에 대한 戰略的 利害와 아·태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에 근거한 經濟的 利害에 기초하고 있다.⁵⁷⁾ 즉

57) 특히 러시아는 아·태 지역이 세계의 공업생산의 60%를 생산하고, 세계의 무역에 접하는 비율도 약 40%에 이르며(*Mezhdunarodnaia zhizn'*, No 4, 1993, s. 28), 경제성장 속도도 아·태 지역 전체 평균으로 4.2%(중국 10.14%, 미국 3.2%, 일본은 최근까지 2.2%, 한국 6.4%, 아세안 6.2%)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ウラジ-ミル ヴァシ-リエヴィッチ コジェ-ヴニコフ, “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ロシアの對外政策,” 菊地茂雄 譯, 「新防衛論集」, 第21卷 第4號 (1994年 3月), pp. 43~44.

러시아는 安保的 次元에서 구소련 이래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왔으며,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한, 아·태 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동북아 安保政策은 역내 전략환경을 러시아에 불리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성하여 역내 문제에 심도있게 관여한다는 目標 위에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東北亞 政策目標은 ①역내 신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의 적극 동참 주도, ②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 견제, ③중국의 反러化 방지, ④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⑤域內 軍縮의 실현, ⑥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극동연해주 및 시베리아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經濟的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국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러시아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 않으며, 또한 중국·북한 등과의 경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즉 페레스트로이카 시대 이래로 러시아의 外交政策은 최우선 과제인 經濟活性化를 위한 外的 與件 조성이라는 국내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러시아의 동북아정책도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①동북아 지역국가와의

경제협력, ②역내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유도, ③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참가, ④東北亞 經濟圈에의 참여 등과 같은 目標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 구소련 해체 이후 불안정한 독립국가연합의 미래와 러시아의 國內政治·經濟的 不安에 따라 향후 러시아는 일차적으로 國內問題 해결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②외교문제에 있어서도 독립국가연합 구성국가들과의 관계를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③외교정책 추진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동북아지역은 유럽에 비해 부차적인 고려대상이었다.⁵⁸⁾

한편 종래 구소련은 革命과 理念的 同質性을 기준으로 友敵概念을 인식하여 왔으나, 경제발전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實用性·合理性을 기준으로 새롭게 親疏關係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인식상에도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사회주의적 유대를 강조한 對北韓 一邊倒政策에서 탈피하여, 남한과의 경제협력도 도모하여야 한다는 韓半島 均衡政策으로 발전하였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目標을 중

58) 자세한 내용은 강원식, “러시아의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외교정책방향,” 「중소연구」, 제17권, 제4호 (1993/4 겨울), pp. 91~121 참조.

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한반도의 平和와 安定 유지, ②남한과의 經濟交流를 통한 實益 추구, 북한에 대한 영향력 견지 모색, ③日本의 대러시아 接近 유도, ④아·태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이다.

첫째, 러시아는 國內 政治安定과 經濟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반도의 平和와 安定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남북한간의 直接對話를 통한 평화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南北對話를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남한과 외교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남한이 최근 들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동북아에서는 물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러시아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南韓과의 경제교류를 모색·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市場經濟化 政策의 外部的 環境을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韓·러 關係發展을 적극 모색하는 동시에, 北韓의 開放·改革을 종용하고 對北韓關係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북한의 체제유지정책이 러시아의 아·태 정책추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하에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러시아 경제상황에 비추어 西方과의 경제협력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러시아의 기대는 매우 크며,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발전이 日本에 대한 刺戟要因으로 작용하여 일본의 對러 진출이 적극화되는 계기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넷째,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아·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대일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본이 북방영토문제를 표면적 이유로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러시아의 對日 관계개선 정책 및 나아가서 아·태 진출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APE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加入을 실현하고, 域內 多者間 安保協力機構를 창설함으로써 아·태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러시아의 동북아 및 아·태 정책은 앞으로도 비록 최근 러시아 외교가 「동」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近外」(blizhnee zarubezh'e)정책, 對美·서방외교 보다 계속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아시아지역을 주요한 武器市場으로 간주하

고 역내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경제지원 획득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앞으로도 계속 모색할 것이며, 특히 일본의 적극적인 대러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의 동북아 및 아·태 정책은 아직도 명확한 政策方向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첫째, 아시아에 대한 外交政策과 軍事政策 간의 調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역내 국가들의 認識에서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내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建設者라기 보다는 불확실한 存在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고, 셋째, 역내 정세가 세계정세와 달리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어 러시아의 行動半徑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향후 엘친 대통령의 한국방문(1992. 11), 중국방문(1992. 12), 인도방문(1993. 1), 일본방문(1993. 10) 등에서 천명된 쌍무적 우호협력관계 강화와 역내 다자간 안보·경제협력 강조 등 平和指向的 外交政策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역내 軍事態勢와 軍事力을 조정하지 않는 한, 이를 통해 역내 국가들의 對러 認識이 개선되는 동시에, 러시아의 행동반경이 확보될 수 있는 유리한 정세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⁵⁹⁾ 러시아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 국제관계에서 주변적 지위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9)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가 1992년 12월 발표한 「외교정책문서」에서 韓半島統一이 ①국경지역에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②아·태지역 국제관계의 變化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러시아 外交의 行動半徑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國益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명백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NTERFAX*, December 1, 1992; *FBIS-SOV-92-232*, December 2, 1992, p. 5. 따라서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원·유도함으로써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아·태 정책의 전반적 隘路를 타개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V.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 安保構造

1. 동북아의 팩스콘소티아: 1+3 체제

냉전시대 동북아 질서를 유지해 온 미·소 양극체제가 와해된 이래 새로운 국제질서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동적인 국제상황에서 역내 각국은 각각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국제질서를 형성시키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은 1991년초 부시 전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의 보급을 전제로 한 「세계신질서」 건설을 제창한 이래, 이 방침에 입각하여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클린턴 현 정권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과거 미·소의 주도적 역할에 밀려 동북아의 地域列強으로서 상응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머물렀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自國의 정치·경제·군사적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추세로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중의 움직임은 미·러의 對立構造 와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의 既得權을 고수하려는 美國의 의도 및

舊蘇聯이 향유하고 있던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계승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와 상충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地域列強으로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양국간의 정치·경제·군사적 대립·갈등이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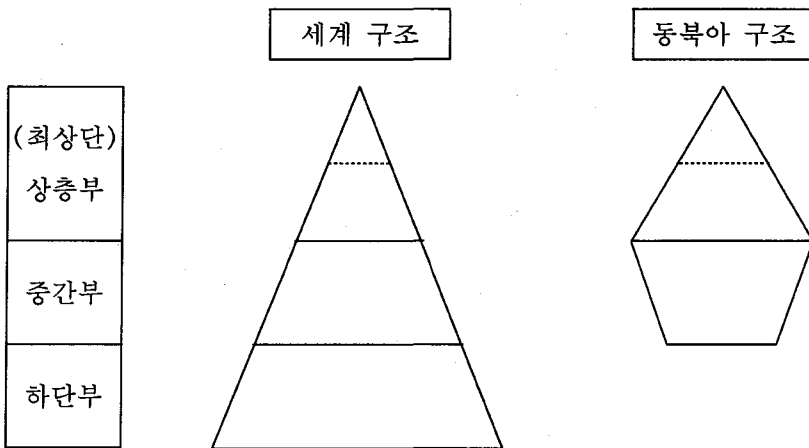
한편 러시아는 현재 국내문제로 대외개입에 소극적이나, 극동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외개입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화하는 한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8자회담」을 제의하고 러시아형 경수로 제공의사를 표명하는 등 사실상 한반도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공개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新國際秩序에는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상호대립·교차하고 있으며 이는 域内の 정치·군사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美國이 唯一 超強大國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고,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와 함께 역내 세력균형을 이루는 방향, 즉 미국이 均衡者的 역할을 수행하고 日·中·러가 勢力均衡을 이루는 「1+3 體制」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동북아 팩스콘소티아 體制이다.

이와 같은 「1+3 體制」는 전술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즉 미국이 最上端에 위치하고,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가 上層部를 형성하고, 그리고 남북한이 中間部를 구성하는 특수한 지역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도표 1〉 美國 主導의 팍스콘소티아 體制의 구조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형성될 「1+3 體制」는 전세계적 차원의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와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남북한 만이 중간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남북한을 둘러싼 上層部 國家들의 영향력 경쟁이 매우 첨예한 對立的 樣相을 보이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協調的 樣相을 보이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과의 관계가 상층부 국가간의 勢力均衡을 좌우하는 하나의 척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을 둘러싼 상층부 국가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對立的 樣相을 보이게 된다.

둘째, 다만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는 본질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國際協調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上層部 國家間的 대립은 표면화될 수 없으며, 적합한 국력을 신장할 수 있을 때까지 대립을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립을 노골화시킬 수도 있을 요인의 발생에 대해서는 공동 협조하에 저지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갈등과 전쟁재발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상층부 국가들 모두가 반대하게 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협조하게 된다.

셋째, 이상과 같이 남북한을 둘러싼 上層部 國家들의 관계가 대립과 협조라는 二重的 性格을 띠기 때문에, 最上端의 미국은 남북한이 상층부 국가들간의 균형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남북한을 직접 관리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상과 같은 동북아 지역구조의 특수성은 최근 北韓 核問題 展開過程에서 잘 노정되고 있다. 즉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동조하면서도, 일본은 남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중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 미국은 대북한 수교를 통해 북한을 직접 관리하

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 이상과 같은 「1+3 체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팩스콘소티아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多者間 協議機構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는 사실상 역내 국가들을 포괄하는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 安保와 經濟의 두 측면에서 다자간 협의기구 창설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협의기구 창설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 주도의 팩스콘소티아 체제」의 작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영토·국경분쟁 및 군비경쟁 등 안보위협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클린턴 미 대통령도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행하고 있고, 중국도 이 구상이 본격화될 경우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도 구소련 시대 이래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조하여 왔다는 점에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에 대한 域內 國家들의 意圖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동 기구를 통해 역내 불안정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는 동 기구를 역내 진출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는 日本과 中國은 각각 자국의 신장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制度的 場으로서 또한

상대방의 과도한 정치·군사대국화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美國의 경우, 균형자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한국 등에 일정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운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雙務的 同盟體制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미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域內 危機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多者間 安保協力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역내 균형자적 역할 수행을 위한 補助裝置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쌍무적 동맹체제와 다자간 안보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추진함으로써 역내 영향력을 견지하고 역내 안전보장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창설될 것인지는 역내 국가들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 명확해 질 것이나, 적어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가 기능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域內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창설구상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와 함께, 역내 경제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다자간 경제협력문제도 활성화되어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APEC)와 같은 역내 경제협력기구가 보다 확대 발전되는 형태로 域內 多者間 經濟協力이 제도화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향후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팍스콘 소티아 체제」의 지역적 구조로서 「1+3 체제」를 바탕으로 균형자로서의 미국이 地域強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중을 통제 하면서 러시아를 소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질 것이며, 이와 함께 역내 정치·경제적 不安定要因을 관리하고 「1+3 체제」의 효율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多者間 協力機構가 구성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2. 統一韓國의 등장에 따른 域內 力學關係 전망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강대국에 비견할 만한 국력을 구비하게 된다. 즉 남북한을 현재 수준에서 통합하더라도 통일한국은 상당한 국력을 보유하여 세계 188개국 가운데 통일된 한국의 면적은 78위, 인구는 12위, 국민총생산은 11위를 점하게 되며,⁶⁰⁾ 군사력도 미·일·중·러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잠재적 군사대국이 된다.

이에 따라 주변국은 한반도 통일로 인한 새로운 강대국 등장

60) Donald S. Macdonald, "The Role of the Major Powers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5, no. 3 (Summer 1992), p. 136. 특히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 등이 결합하면 자체의 市場確保率이 증대되어 對外貿易依存度가 격감할 것이며, 군사력 감소 및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은 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이전의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역내국가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상층부 국가간의 역학관계에 반영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⁶¹⁾

〈도표 2〉 統一韓國 및 周邊國家의 經濟力 비교

	면적 (1,000km ²)	인구 (100만명)	국민생산 (1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달러)
미 국	9,385	259.5	6,374	24,800
일 본	378	125.3	3,761.5	20,700
중 국	9,600	1,201.2	507.5	2,200
러 시 아	17,075	148.9	1,160	7,800
통일한국	221.6	68.1	340.3	-
남 한	99.2	45	319.5	10,000
북 한	122.4	23.1	20.8	1,000

資料: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4~1995* (London: I.I.S.S., 1994), pp. 22, 111, 170, 176, 178, 180.

61)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4국의 소극적인 입장과 그 원인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방안은 정규섭·강원식·문홍호,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18ff. 참조.

〈도표 3〉 統一韓國 및 周邊國家의 軍事力 비교

	현역군 (1,000명)	예비군 (1,000명)	국방예산 (10억달러)	전 합	전투기
미 국	1,651	2,048	292	1,150	4,520
일 본	237.7	47.9	42.1	160	510
중 국	2,930	1,200	6.7	1,080	6,160
러 시 아	1,714	2,400	79	2,150	6,900
통일 한국	1,761	5,040	16.3	850	1,300
한 국	633	4,500	14	230	490
북 한	1,128	540	2.3	620	810

資料: 현역군·예비군·국방예산 통계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4~1995* (London: I.I.S.S., 1994), pp. 22, 111, 170, 176, 178, 180; 전함 전투기 통계는 日本防衛廳 編, 「防衛白書, 1994」 (東京: 防衛廳, 1994), pp. 275, 283.

그러나 「1+3 체제」내에서의 流動性을 활용할 경우,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즉 패권소멸후의 국제환경이 아직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있으므로 「현상변경」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國際協調라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활용하면서 남북대화를 통해 국내외적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한편으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새로운 패권을 지향하는 최상단 미국과 적극 협조하고, 동시에 상층부 국가간의 경쟁을 활용할 경우, 統一을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한반도가 통일되면 또는 한반도 통일이 불가피한 상황

에 이르면, 미·일·중·러는 통일한국이 자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되거나 타국의 영향력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즉 「1+3 체제」하에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최상단의 美國은 일·중·러의 세력 강화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통일 한국의 국력 증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일·중·러 등 上層部 國家들도 통일 한국 자체가 강대국화 또는 패권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보다는 통일 한국이 타국과 연계·제휴함으로써 자국의 손실로 결과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통일 한국이 국력신장의 好機를 맞이하여 상층부 국가로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국력쇠퇴와 일·중의 국력신장 등의 요인에 의해 「1+3」체제가 아니라 미·일·중·러의 4角均衡體制下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통일 한국이 국력을 신장하여 미·일·중·러간의 기존 세력균형체제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능성을 경계할 것인 바, 통일 한국이 상층부 국가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4각균형체제가 형성될 경우에는 한반도 통일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세력균형체제는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하고, 이에 따라 불확실한 現狀變更을 초래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4각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에 따라 4각간의 암묵적 합의로 분단 고착화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政治·經濟·軍事라는 3가지 측면에서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국력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동북아의 「1+3 체제」에서 미국은 정치·경제·군사적 강국이나, 日本은 經濟, 中國은 政治, 러시아는 軍事로 각각 特化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일본과 중국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군사적 강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이 동북아 정세의 결정요인이라 말하기는 어려우며, 역내 군사 정세는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또한 경제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괄목한 상황에 있으나, 미·일간의 경제마찰이 역내 정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특히 한반도문제 등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층부 국가간의 역할이 특화되어 있는 「1+3 체제」에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상당한 국력을 구비하게 될 통일한국의 등장은 역내 力學關係의 중대한 變數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에서는 최상단의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중·러 등 상층부 국가간에 聯合勢力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국제협조를 기축으로 하는 체제이므로 反美 國家群의 형성은 미국 주도하에 공동의 국제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층부 국가들은 상호간의 提携에 의하기 보다는 중간부 국가와의 連繫 또는 하층부 국가에 대한 착취 등 個別的 努力에 의해 국력을 신장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등장에 따라 상층부 국

가간의 역학관계는 당해국의 통일한국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상층부의 각 국가별로 통일한국과의 관계를 상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美國은 미국주도형 파스콘소티아체제의 유지 또는 미국 단극체제 형성을 위해 일·중·러의 국력신장을 저지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 통일한국과 협조한다. 즉 한·미 협조하의 지역안정화이다.

둘째, 日本은 정치·군사대국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가운데, 아·태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한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아·태지역내 다자간 안보·경제 협력에서 미국·중국 등과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일본의 정치대국화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은 통일한국과의 공동 협조를 모색할 것이다.

셋째, 中國은 12억 인구에 걸맞는 경제력을 구비하면 동북아 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패권국가로 등장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향후에도 경제발전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대내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조가 불가피하나, 미·일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이 중국의 패권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것인 바, 중국의 입장에서 결국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넷째, 상층부 국가 가운데 비교적 열세에 있는 러시아는 역

내에서 군사력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력 행사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바, 역내 군사력을 최대한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미·일·중이 극동지역 진출을 적극화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극동지역 경제개발 필요성과 미·일·중에 의한 극동지역 잠식이 라는 二律背反性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경제면에서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정치면에서도 통일한국을 통해 아·태지역에 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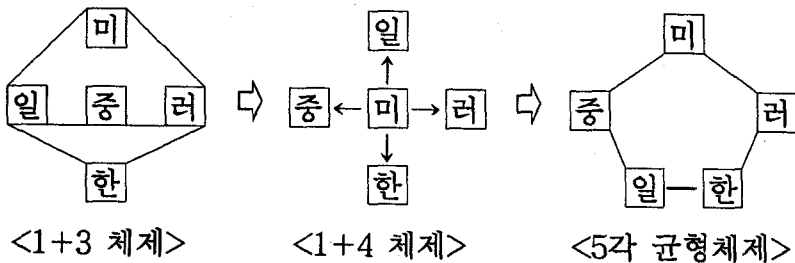
V. 統一韓國의 外交·安保政策方向

1. 基本方向

통일 이후 한국은 국내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民主化와 經濟發展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되, 국제적으로는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신장하여 先進國으로 진입하는 데 국가안보정책의 基本目標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이 동북아 국제안보구조에서 일·중·러 등과 비견할 수 있는 국력을 신장·구비함으로써 동북아지역내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의 上層部 國家로 진입하여야 할 것이다. 즉 「1+3 체제」의 상층부에 참가함으로써 최상단의 미국과 한·일·중·러의 「1+4 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나아가 한·미·일·중·러의 「5각 균형체제」를 목표로 적극적인 국력신장 정책을 추진한다.

〈도표 4〉 統一韓國의 國家目標 및 政策推進方向



이상과 같은 「1+3 체제 → 1+4 체제 → 5각 균형체제」로의 國家發展을 위해 통일한국은 다음과 같은 政策推進方向을 설정한다.

첫째, 최상단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수행에 협조함으로써 「1+3 체제」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즉 통일한국을 배제한 미·일·중·러의 「4각 균형체제」 형성을 방지한다.

둘째, 최상단과 중간부간의 직접관계를 이용하여, 상층부의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상층부로 진입함으로써 「1+4 체제」를 이룩한다.

셋째, 국제정치 무대를 동북아에서 아·태지역으로 확대하여 역학구조내 하층부를 확보함으로써 중간부에 있는 통일한국의 국력신장 및 상층부 진입에 대한 일·중·러의 견제를 최소화하고 상층부 국가간의 세력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國力の 相對的 比較優位를 고려한 對상층부 정책을 추진한다. 즉 일본과의 정치·외교협력, 중국과의 경제협력, 러시아와의 정치·외교·경제협력 등을 중점 모색한다. 특히 일·중의 정치·군사대국화 경향을 견제하고, 상층부 국가 가운데 비교적 국력이 취약한 러시아와의 공동협조방안을 강구·추진한다.

다섯째, 아·태 지역내 다자간 안보·경제협력을 적극 주도·동참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역할을 제고하고, 역내 하층부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추진방향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구체적으

로 ①대미 협조외교, ②일·중 견제외교, ③대러시아 협조외교, ④아·태 다자간 협력외교 등을 추진한다.

2. 政策推進方向

가. 對美 協調外交

美國은 냉전종식 및 소련방의 해체에 따라 唯一 超強國의 地位를 확보하는 한편,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을 재평가하면서 이 지역에서 「均衡者的 役割」 지속과 함께 影響力 擴大를 도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들은 미국의 효율적인 「균형자적 역할」 수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의 既得權 상실을 원치 않으나 국제정세의 긴장완화, 국내 경제력의 약화 등으로 아·태지역 주둔군의 축소를 포함한 戰略的 調整이 불가피하며,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한다. 둘째, 日本은 현재 경제력에 상응하는 政治·軍事大國化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향후 동북아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영향력 강화를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일본의 역할(특히 군사력) 강화와 남북한 통일은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한반도 통일로 말미암아 한국의 對美 安保依存 필요성이 감소된다.

요컨대, 동북아 신국제질서의 궁극적인 모습은 「균형자로서

의 미국과 세력균형관계에 있는 일·중·러」라는 「1+3 체제」에서 점차 미국의 역내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미·일·중·러의 「4각 균형체제」로 이행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4각 균형체제」는 첫째, 한반도에서의 현상변경 즉 統一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둘째, 한반도가 통일되었다고 하여도 통일한국이 국력을 신장하기에는 제약요인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4각 균형체제」 보다는 「1+3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한반도 통일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한국의 외교정책방향은 일차적으로 통일한국의 국력이 신장되어 상충부국가로 진입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이 원만하게 수행되고 「1+3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통일이후에도 미국과의 既存 紐帶關係를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對美 관계에 있어서 最大의 實利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모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공백에 따른 緊張發生 可能性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패권쇠퇴기 및 이행기 국제관계에서 국력신장을 위해서는 국제협조란 이름하의 費用 分擔에 최소한으로 참가하면서 스스로의 국익을 확보해야할 것인 바, 최상단 미국과의 직접관계를 이용하여, 상충부 국가들에 비해 적은 費用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통일이후 북한이 소멸한 상황에서도 미군의

계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확보함으로써 안보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통일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방파제로서 활용하되, 한편으로 통일이전과는 달리 통일한국 주둔미군의 존립근거를 역내 평화·안정 유지에 둠으로써 주한미군의 비용분담에 일·중·러 등 여타 상충부 국가들도 동참시켜 한국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증장기적 관점에서 통일한국이 명실공히 상충부 국가로 진입하고 미·일·중·러와 대등한 同伴者關係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미 관계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中長期的 觀點에서 한·미 관계를 설정·운용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日·中 牽制外交

일본과 중국의 정치·군사대국화 노력은 「1+3 체제」를 위협하는 일차적인 요소이다. 특히 일·중의 군사력 증강은 역내에서의 군비경쟁을 자극하고, 나아가 동북아정세의 군사적 긴장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1+3 체제」의 유지·발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國益 측면에서도 일·중의 정치·군사대국화 추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통일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안보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방위를 위한 최소한

도의 軍事力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한국의 適正 軍事力 規模를 산정함에 있어서 증강되고 있는 일·중의 군사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통일한국은 일·중의 군사력 증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보전략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이전 북한을 假想敵으로 규정하고 地上軍 중심의 군사전략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중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海·空軍力 현대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⁶²⁾ 그러나 통일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군사력 증강 만으로 통일한국이 역내 국제관계에서 상층부에 진입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한국이 일·중의 군사력에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일·중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완화하고, 일·중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地域紛爭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내 多者 安保協力體 구상에 적극적으로 주도·동참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되, 적어도

62) 이춘근 박사는 1990년대 한반도 주변의 위협이 점차 海洋의 性格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 군사전략의 장기적인 지향방향은 바로 이같은 海洋의 威脅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춘근, “국제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군사전략의 지향방향,” 「전략연구」, 통권 1호 (1994 창간호), pp. 165~66

일본 수준의 核開發能力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미·중·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특히 中國이 最大 核抑止戰略을 채택하여 핵탄두의 소형화와 핵탄두 운반 미사일의 성능 개선에 매진하고 한반도에 대해서도 핵탄두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 대국화를 모색하고 있는 日本마저 핵무기를 개발·보유할 경우, 통일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넷째, 통일한국은 한·미 안보협력을 근간으로 하되, 일·중과의 安保協力 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간의 競爭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는 바, 한국은 한·미 안보유대를 바탕으로 일·중과의 안보협력을 유지함으로써 對日·中 均衡外交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편 日本과 中國에 대한 國家別 細部政策을 살펴보면, 우선 日本에 대해서는, 일본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안전보장 등 모든 면에서 통일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국가이며, 일본도 21세기 아·태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유지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향후에도 긴밀한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관계를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부터 동북아 지역 차원을 거쳐 양국관계의 현안을 보는 水平的 思考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과거와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를 고려한 未來指向的·垂直的 思考가 요구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의 外交·經濟·安保協力을 강화하여 증대되고 있는 일본의 역내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韓國은 日本에 대하여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일본의 國際的 역할 증대 노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하자면, 일본의 정치적 역할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일본의 역할 증대에 부정적인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진출에 협조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의 이익을 모색한다.

셋째, 재일동포의 인권이나 정신대 문제, 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제2차 대전에 대한 인식 등 과거사문제 등 한·일간의 기존 쟁점과 현안은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계속 계류중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과거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未來指向的 韓·日 協力關係 구축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 문제에 대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한편 中國에 대해서는, 중국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

이 自國의 정치·외교·경제·군사적 이해관계를 철저히 고려한 바탕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한국도 중국의 기본입장과 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바람직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중관계를 동북아 지역의 平和와 發展을 주도하는 주요 역량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한·중 양국이 동북아 지역의 安保·經濟問題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동북아 신국제질서 수립을 촉진하는 同伴者 關係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한·중간의 경제교류·협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한국의 대중국 경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양국간 경제교류·협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양국간 相互補完, 互惠·均衡的 經濟關係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중 경제관계는 협력요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의 확보 경쟁 등 경쟁·대립요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과의 軍事·安保協力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국과의 군사·안보협력은 통일한국이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한·중관계의 질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중 군사·안보협력을 동북아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다

자간 안보협력 차원으로 확대·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臺灣과의 관계를 재확립하는 문제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정치의 현실상, 특히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韓·中關係, 韓·臺灣關係를 같은 수준으로 兩立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북한 요인이 소멸되고 통일된 이후 한국은 실질적 측면에서 기존의 한·대만관계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물론 이러한 정책은 통일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즉 미국·일본 등 주요 서방국가들이 대만과의 외교단절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교류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통일한국도 非政治·民間次元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더욱이 최근 소련·동유럽 붕괴 등 국제정세의 변화, 「務實外交」와 「雙重承認」으로 대표되는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에 힘입어 많은 국가들이 대만과의 관계를 再強化하고 있다는 점을 直視하여야 할 것이다.⁶³⁾ 이와 관련, ①대만

63) 예를 들어 미국 클린턴행정부는 1994년 9월 미국주재 「北美事務協調委員會」 지위 격상, 대만관리의 訪美 및 미국관리들과의 접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만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대만과의 실질적인 관계발전을 도모하였다. 일본도 1972년 대만과의 斷交 이후 처음으로 1994년 10월 22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通産相이 대만 江炳坤 經濟部長과 회담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발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Philip Bowring, "America's New Policy on Taiwan is Timid and Unimaginativ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12, 1994; Simon Beck, Geoffrey Crothall, "Beijing Hits at US Approach to Taipei,"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9, 1994; 「中國時報」, 1994. 10. 23 참조.

의 경제력에 비추어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을 무시하지 못하는 현실, ②한·대만간의 전통적 우의관계, ③남북통일로 한국의 외교적 부담은 소멸되었으나, 반면에 중국의 대만요인에 따른 부담은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대만과의 관계발전은 중국에 대한 적절한 견제 지렛대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對러시아 協調外交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 등 국내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러시아는 앞으로도 당분간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CIS 구성국 등 近外國家들에 대한 정책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아시아외교는 대미·유럽 외교에 이어 아주 낮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즉 러시아 외교는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국제적 지위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세계적 차원에서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모든 영역의 國際懸案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구소련 역내에서의 입지 확보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외 최근 보스니아사태 등에서 나타나듯이 유럽에서의 영향력 모색으로 반영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러시아의 아시아 외교는 담보상태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러시아는 구소련시대 이래로 유라시아국가임을 계속 강조하여 왔으며, 특히 극동지역의 개발이 러시아의 長期的 國家發展戰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결코 경시할 수 없다. 다만 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외교에 집중 투여할 수 있는 資源에 있어서도 한정적일 뿐이다.

아시아지역에서 국력을 신장하려는 통일한국에 있어 러시아의 이러한 취약한 입장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러시아가 적어도 당분간 동북아시아에서 패권국가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上層部 진입을 목표로하는 통일한국의 파트너로 될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조하에 일·중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상호 이익을 확충함으로써 역내 역할 증대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러관계를 다양한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인 바, 특히 통일한국은 다음과 같은 대러시아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극동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엄청난 資源의 寶庫로서 21세기 러시아 국가발전의 사활적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극동지역과의 인적·문화적 교류도 적극화한다. 이를 통해 상호이해가 증진될 때, 실질적인 경제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구소련 구성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韓人僑胞들이 극동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극동지역에서 한인사회의 정치·경

제·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韓人共同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구소련지역 거주 한인에 대한 지원은 한·러 관계의 中長期的 發展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統一 韓國의 未來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韓人의 權利 보호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교섭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한인들이 極東地域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협의·추진할 필요가 있다.⁶⁴⁾

둘째, 經濟協力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경제이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進出基盤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하면서도 꾸준한 接近方式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IMF, IBRD 등 國際經濟機構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雙務的 關係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한·러 경제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되, 國際機構를 통한 多者間 經濟協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내 分權化 현상으로 지방정부의 經濟權限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러시아의 각 공화국이나 州(oblast') 또는 邊疆(krai)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셋째, 舊蘇聯 構成國家들과의 개별적인 紐帶를 강화한다.

64) 독일은 對러 經濟支援의 유리한 外交의 立地를 활용하여 스탈린이 2차 대전중 독일계 주민을 추방할 때까지 독일자치공화국이 위치했던 볼가강 유역에 獨逸人의 再定着을 허용하는 條約을 러시아와 체결(1992. 7. 10)한 바 있다.

구소련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聯邦體制가 재차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구소련 구성국간의 經濟的 紐帶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소련 구성국 전체의 共同關心事를 조정하는 中央機構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구소련 구성국간에 모색되고 있는 連繫傾向을 주목하여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個別 國家와의 관계를 강화·발전시킴으로써 구소련지역의 여하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對備策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外交政策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구소련 구성국가들에 대한 個別的인 政治·外交·經濟的 紐帶關係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러시아와의 軍事協力을 모색·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韓·美 관계, 무기체계의 상호 호환성, 事後管理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한·러 군사협력은 否定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軍產複合體 人脈과의 유대 모색, 군수산업의 民需 轉換過程에의 참여를 통한 경제실리 도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범위내에서나마 한·러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아·태 多者間 協力外交

「1+3 체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역내 다자간 안보·경제협력기구 등 國際레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미국 주

도의 팩스콘소티아 체제」의 下層部 국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정치의 무대를 동북아지역에서 아·태 지역으로 넓혀 利害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즉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경제협력기구 창설이 필요불가결하다.

한반도 통일시점까지 이러한 역내 국제레짐이 창설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일 아직 창설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통일한국의 주도하에 이를 적극 추진하고, 이미 창설·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동 기구내에서의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최대한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각국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역내 다자간 안보·경제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는 일찍이 구소련에 의해 강조되어 왔으나,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政治·軍事的 役割 증대 차원에서 自衛隊의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는 동시에, 美·러·中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전보장기구 설치를 주장함으로써 동 기구를 통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문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클린턴 미 대통령도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국은 동북아 多者安保對話가 역내국가와의 쌍무적 안보동맹관계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 주도의 팩스콘소티아 체제」 즉 「1+

3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의기구 창설이 불가피하고, 그 機構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다자안보대화가 활성화되는 것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또한 중국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가 美國 主導下에 진전될 경우 그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⁶⁵⁾ 동북아에서는 양자간 信賴構築措置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⁶⁶⁾ 그러나 중국은 4강의 이익이 첨예하게 교차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안보에 최대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⁶⁷⁾

따라서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한다는 이와 같은 構想이 구체화될 경우, 한국(통일한

65) 중국은 클린턴 美 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건설 구상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경계한 바 있고, 일본의 다자안보협의체 형성 구상에 대해서도 역내에서 일본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여 왔다. 郭長林, “克林頓的亞太戰略,” 「瞭望」, 1993年 第32期 (1993. 8. 9), pp. 41~42.

66) 何方, “亞洲的崛起,” 「世界知識」, 1994年 第1期 (1994. 1. 1), pp. 4~5; Guo Zhenyuan, “Asian-Pacific Security System,” *Window*, October 1, 1993, p. 27.

67)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최근 중국의 관심은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4. 3. 24; 燕楊, 楚刀, “亞太地區安全問題及各方基本態度,” 「現代國際關係研究」, 1994年 第7期 (1994. 7), pp. 2~7; Guo Zhenyuan, “Prospect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jing Review*, July 11~17, 1994, pp. 20~22 등 참조.

국)은 이 機構에 적극 참여하여 이 기구내에서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통일한국은 통일이후 남북한 군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군비축소가 불가피할 것인 바, 한반도에서의 軍縮을 동 기구내에서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반의 군비통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태지역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과 관련하여, 동 구상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통일한국)은 東北亞平和協議會 구상을 포함하여 역내국가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 구상을 종합하여 역내국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는 方案을 새로이 강구·천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통일한국)이 제시할 域內 多者安保對話 構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영토문제와 인권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제외시키고,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역내국가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主要 議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한 투명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國防白書 상호 교환, 공동 군사훈련 실시 및 國防 當局者間 정기 會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I. 結 論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등장을 前提로 집필되었으며,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정상의 주변환경과 외교·안보·통일정책 문제는 論外로 하였다. 또한 전세계적 차원의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의 지역적 구조로서 동북아에서의 「1+3 체제」라는 이론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시의 동북아 안보구조를 상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목표와 방향을 강구·제시하였다. 즉 통일한국은 동북아 국제안보 구조에서 일·중·러와 비견할 수 있는 국력을 신장·구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내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의 上層部 國家로 진입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1+3 체제」의 상층부에 참가하여 「1+4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5각 균형체제」를 목표로 적극적인 국력신장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통일이전부터의 延長線上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정책추진방향이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입각하여 설정되고, 이에 따라 통일이 실현될 때, 통일한국의 정책방향은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바꿔 말하자면, 현 단계에서 「선진국 또는 강대국 진입」이라는 國家目標를 설정한 바탕위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南北統一을 이룩하고, 통일된 국가의 확충된 국력을 기반으로 국가목표를 구

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로 현재와 통일한국의 일관성있는 政策推進方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정책방향과 현재의 정책방향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 존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보장되고, 이에 따라 그 실현성과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정책추진방향을 「1+3 체제 → 1+4 체제 → 5각 균형체제」로의 國家發展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실상 전제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통일시의 동북아 국제안보구조가 「1+3 체제」라는 점이며, 둘째, 통일한국이 균형자인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조하에 「1+3 체제」에서 「1+4 체제」로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4각 균형체제」가 아니라 통일한국을 포함한 「5각 균형체제」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4장 2절에서 통일한국의 등장에 따른 동북아지역내 역학관계를 전망하면서 지적하였듯이, 미·일·중·러간의 「4각 균형체제」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勢力均衡體制를 손상시키는 現狀變更, 즉 한반도 통일 또는 통일한국의 국력신장·상충부진입에 대해 4각이 모두 경계·반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4각 균형체제」가 아니라 現狀打破的이고 역학관계가 流動的인 「1+3 체제」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1+3 체제」하에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통일

이 실현될 경우, 통일한국을 포함한 「1+4 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1+3 체제 → 1+4 체제 → 5각 균형체제」로의 國家發展이라는 통일한국의 정책 목표는 「1+3 체제 유지·발전 → 한반도 통일 → 1+4 체제 형성 → 5각 균형체제 구축」이라는 형태로 現在의 국가목표와 정책추진방향으로 등치될 수 있다.

또한 美國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이 상층부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美國과의 관계 발전이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한국의 대미 정책은 사실상 「1+3 체제」하에서 남북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현재의 대미 정책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냉전이후의 급격한 유럽질서 재편과정에서 특히 獨逸의 국력 강화를 우려하고 있는 프랑스의 입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적지않은 示唆點을 제공한다. 즉 미국에 비견할 수 있을 새로운 강대국 또는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가 유럽에서 독일이라면,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이며,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인식과 정서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新國際秩序에 대해 프랑스 학자들은 미국이 서유럽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 동·중부유럽 국가들이 점차 서유럽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미국은 냉전 종결이후에도 역설적이지만 신국제질서 속에서 전세계적인 지도자로

서 보다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르루슈(Pierre Lellouche)는 냉전이후 국제체제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국가간의 無秩序와 混沌을 방지하는 유일한 現實的 代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이시(Dominique Moïsi)와 루쁘니끄(Jacques Rupnik)은 유럽은 다음과 같은 적어도 3가지의 死活的 機能을 수행하기 위해서 美國에 밀접하게 의존하여야 한다고 관측하였다. 즉 첫째, 戰略的 側面에서 유럽은 미국이 서유럽의 안보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구소련, 특히 러시아의 軍事力에 대한 均衡者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둘째, 政治的 側面에서 유럽은 미국이 유럽대륙에서 패권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맡아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心理的 側面에서 유럽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민족주의와 외국인혐오감 등 유럽이 안고 있는 「악령」(demons)에 대한 방벽으로서 작용하기를 원하고 있다.⁶⁸⁾

한편 美軍의 유럽 駐屯問題와 관련하여서도, 지난 수십년간 프랑스 정부는 수시로 서유럽에서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냉전이후의 새로운 상황하에서 현

68) Pierre Lellouche, *Le Nouveau monde: De l'order de Yalta au desordre des nations* (Paris: Grasset, 1992); Dominique Moïsi, Jacques Rupnik, *Le Nouveau continent: Plaidoyer pour une Europe renaissante* (Paris: Calmann-Lévy, 1991), p. 157, cited in P. Terrence Hopmann, "French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after the Cold War,"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Supplement to th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8, Supplement 1 (April 1994), pp. 73ff.

재 프랑스 학자들은 오히려 美軍 駐屯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폰텐느(André Fontaine)는 安保 概念에 핵전쟁의 위협 뿐만 아니라 실업의 공포, 질병, 기아, 환경파괴, 그리고 일상적인 폭력까지 포함됨에 따라, 오늘날 도처에서 유럽과 전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새로운 세계적 불안정을 지켜줄 헌병(gendarme)은 누구인가면서 반문하고 있다. 폰텐느는 美國을 제외하고는 支援者가 없다면, 유럽은 반드시 안전보장의 重核으로서 적어도 최소한의 美軍이라도 주둔하여야 하고, 더욱이 危機 時에는 증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⁶⁹⁾

이상과 같은 프랑스의 인식에서 미국이 반드시 「정의의 화신」으로서 세계질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럽대륙 밖에 있었으나 유럽대륙 속에서 유럽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관리해 온 미국이 점차 멀어져 가고, 같은 유럽내의 가까운 이웃 독일이 그 자리를 메우려는 상황 속에서 경제력을 제외하고는 독일을 능가하는 국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독일의 성장을 우려하고 있는 프랑스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하

69) André Fontaine, *L'un sans l'autre* (Paris: Fayard, 1991), p. 235, cited in *ibid.*, p. 74. 그러나 폰텐느는 미국이 신국제질서의 헤게몬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單極體制(unipolarity)는 강력하고 헌신적인 미국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美國의 歷史와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으로 단극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Fontaine, *L'un sans l'autre*, p. 271, cited in *ibid.*, pp. 74~75.

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프랑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代案은 가능한 한 미국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일 뿐이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프랑스와 한국이 대등한 국력을 갖고 유사한 국제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프랑스는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내에서 독일 못지 않는 영향력을 구비하고 있어 對美 關係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독자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프랑스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인식은 적어도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 나가야 할 政策代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고 있는 주변정세 속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의 최상단에 위치한 美國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여타 上層部 國家들의 영향력 競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國力を 제고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는 명백히 霸權衰退期에 해당하며, 차세대의 패권을 향한 현실주의적·구조주의적 國際葛藤과 對立이 현재의 제도주의적 國際協調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시기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국제협조 분위기 속에서 차세대의 갈등과 대립에 대비하여 국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短期的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1+3 체제」 안정에 기여하면서 우리의 국력을 신장하고 통일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며, 長期的으로는 통일한국이 「미국 주도의 팍스콘소티아 체제」의 상층부 국가로 되어 「1+4 체제」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5각 균형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민족통일연구원.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신상진, 전동진.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10.
- 이유진. 「일본의 핵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정규섭, 강원식, 문홍호.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藤田俊彦. 「アメリカの世界新戦略」. 東京: 新日本出版社, 1992.
- 石井貫太郎. 「國際政治分析の基礎」. 東京: 晃洋書房, 1993.
- _____. 「現代國際政治理論」.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1993.
- 小島清. 「續·太平洋經濟圈の生成」. 東京: 文眞堂, 1990.
- 岩井忠熊, 望田幸男, 山口正之 編. 「國際貢獻論とアメリカ新戦略」. 東京: 大月書店, 1993.
- 日本防衛廳 編. 「防衛白書 1990」. 東京: 防衛廳, 1990.
- 日本防衛廳 編. 「防衛白書 1991」. 東京: 防衛廳, 1991.
- 日本防衛廳 編. 「防衛白書 1994」. 東京: 防衛廳, 1994.

- 日本外務省 編. 「外交青書」(平成 3年版). 第35號.
- 杜攻 編. 「轉換中的世界格局」.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3.
- Balassa, B. A. et al., eds.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North-Holland, 1975.
- Bull, Hedley.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 Carter, Jimmy and Yasuhiro Nakasone. *Ensuring Alliance in an Unsure World: the U. S.-Japan Global Partnership in the 1990's*. Washington, D. 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1.
- Cockloft, J. D., A. G. Frank and D. L. Johnson. *Dependence and Underdevelopment: Latin America's Political Economy*. Anchor, 1972.
- Gilpin, Robert.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Haas, Ernst B. *Beyond the Nation-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 Hoffmann, Stanley. *Contemporary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0.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_____. *The Military Balance, 1994~1995.*

Kegley, Charles W. Jr. and Eugene R. Wittkopf.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Keohane, Robert O. *Neorealism and Its Cri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_____.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_____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1977.

Kim, Dalchoong, Soo-Eon Moon, Chung Min Lee.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Challenges and Prospects Towards the Year 2000.*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1993.

Krasner, S. D.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Lee, Bum-Joon and Sung-Chul Yang. *The Changing World Order: Prospects for Korea in the Asia Pacific Era.*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1992.

- Modelski, George.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New York: Macmillan Press, 1987.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66.
- Myrdal, G. *Richlands and Poor: The Road to World Prosperity*. Harper and Row, 1957.
- Roberts, Brad. ed. *U. 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ambridge, Mass.: MIT Press, 1992.
- Statement by Richard H. Solomo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n the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6, 1991.
-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U. S. Senate. by General Louis Menetrey, Commander of U. 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 C., February 8, 1990. i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4, no. 1 (Spring 1990).
- Tucker, Robert W. and David C. Hendrickson. *The Imperial Temptation*. New York: Council on a Foreign Relations Press, 1992.
- U. 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0*.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U. 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Report (A Report to Congress)*. July 1992.

_____.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U. S. President Bill Clinton's Address to the National Assembly. July 10, 1993.

Wallerstein, I.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Inc., 1979.

2. 논 문

강원식. “러시아의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외교정책방향.” 「중소연구」. 제17권, 제4호 (1993/4 겨울).

_____. “北方領土問題에 대한 러·日の 立場과 解決 展望.” 「統一研究論叢」. 제1권 제2호 (1992).

김달중. “동북아지역의 해양안보환경: 쟁점 및 전망.” 「21세기와 한국의 해양안보」. 해군본부 제3회 함상토론회, 1994.

이서향. “한국의 해양관할권 주장.” 김달중 편. 「韓國과 海路 安保」 (서울: 법문사, 1988).

이춘근. “국제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군사전략의 지향방향.” 「전략연구」. 통권 1호 (1994 창간호).

コジェーヴニコフ, ウラジ-ミル ヴァシ-リエヴィッチ. “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ロシアの對外政策.” 菊地茂雄 譯. 「新防衛論集」. 第21卷 第4號 (1994年 3月).

“中國經濟の躍進是す世銀とIMFの報告.” 「世界週報」. 1993年 7月 20日.

近藤重克. “冷戦後の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をいかに確保するか.” 「新防衛論集」. 第20卷 第1號 (1992年 6月).

石井貫太郎. “ポスト冷戦時代の到來とマクロ國際政治理論の體系化: ‘新現實主義的總合’としての統一パラダイム構築への道.” 日本國際政治學會 編. 「國際政治」. 第106號 (1994年 5月).

鈴木篤之. “日本原子力政策とプルトニウム問題.” 「國際問題」. no. 397 (1993年 4月).

牛田久美. “ポスト冷戦時代における米國の對外戰略.” 「新防衛論集」. 第21卷 第1號 (1993年 6月).

中西輝政, 長谷川慶太郎, 高坂正堯. “90年代日本の防衛構想.” 「Voice」. 1990年 8月.

中野謙二. “東北アツア地域の協調と中國の對應.” 「中國研究月報」. 1990年 9月號.

豊田利幸. “戰域ミサイル防衛(TMD)とは何か.” 「軍縮問題資料」. No. 159 (1994年 2月號).

- 郭長林. “克林頓的亞太戰略.” 「瞭望」. 1993年 第32期 (1993. 8. 9).
- 來金烈 等. “堅持軍民結合, 發展兵器工業.” 「人民日報」. 1991. 10. 23.
- 史敏. “九十年代的世界經濟格局和亞太地區的經濟合作.” 「世界經濟」(中國社會科學院 世界經濟與政治研究所). 1990年 10月號.
- 燕揚, 楚刀. “亞太地區安全問題及各方基本態度.” 「現代國際關係研究」. 1994年 第7期 (1994. 7).
-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4. 3. 24.
- 鄭德林. “中共將改善海軍空軍裝備.” 「鏡報」. 1994年 2月號.
- 陳啓懋. “關於在亞太地區建立政治新秩序的探索.” 「國際問題研究」. 1992年 1期.
- 陳哨賓. “劉華清說中國反霸但不稱霸.” 「鏡報」. 1994年 5月號.
- 何方. “亞洲的崛起.” 「世界知識」. 1994年 第1期 (1994. 1. 1).
- Akio, Yutaka. “The Soviet Union’s Asia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Jap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1 (Spring/Summer 1991).
- Baker, James A.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 Beck, Simon and Geoffrey Crothall. “Beijing hits at US

- approach to Taipei."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9, 1994.
- Bowring, Philip. "America's New Policy on Taiwan is Timid and Unimaginativ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12, 1994.
- Brzezinski, Zbigniew. "The Consequences of the End of the Cold Wa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delphi Papers*. No. 256 (Winter 1991/92).
- Clark, Gregory. "Tokyo's Claim to the Kurils Is Shark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18, 1992.
- Crow, Suzanne. "Russia Seeks Leadership in Regional Peacekeeping."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15 (April 4, 1993).
- Ford, Carl W. Jr. "The U. S. Future in Asia."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 No. 2 (Winter 1990).
- Galtung, Johan.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8, No. 2 (1971).
- Gross, Natalie. "Russia's Strategy: East and West?" *Jane's Intelligence Review*. June 1992.
- Guo Zhenyuan. "Asian-Pacific Security System." *Window*. October 1, 1993.
- _____. "Prospect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jing Review*. July 11~17, 1994.

Hanami, Andrew K. "The Emerging Military-Industrial Relationship in Japan and the US Connection." *Asian Survey*. Vol. XXXIII, No. 6 (June 1993).

Hopmann, P. Terrence. "French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after the Cold War."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Supplement to th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8, Supplement 1 (April 1994).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_____.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s." *Survival*. Vol. XXXIII, No. 1 (January/February 1991).

Karniol, Robert. "China Ahead in Asian States' Post-Cold War Battle." *Jane's Defence Weekly*. September 25, 1993.

Kawakami, Takao. "Guidelines for Foreig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2, 1993.

Keohane, R. O. "Theory of World Politics: Structural Realism and Beyond." in A. W. Finifter, ed.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83.

- Krauthammer, Charles.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Vol. 69, No. 5 (Winter 1990/91).
- Macdonald, Donald S. "The Role of the Major Powers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5, no. 3 (Summer 1992).
- Nye, Joseph S. Jr.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 Paik, Jin-Hyun. "Some Legal Issues Related Maritime Jurisdiction of North Korea." Proceedings of the 21th Annual Conference of the Law of the Sea Institute (1987).
- Rahr, Alexander. "Atlanticists versus Eurasians in Russian Foreign Policy." *RFE/RL Research Report*. May 29, 1992.
- Segal, Gerald. "The Challenges to Chinese Foreign Policy." *Asian Affairs*. vol. X X I, part III (October 1990).
- Sunkel, O. "Big Business and Interdependence: A Latin America View." *Foreign Affairs*. vol. 50, no. 3 (April 1972).
- Tai Ming Cheung. "China's Buying Spre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8, 1993.
-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U. S. Senate. by Gen. Louis Menetrey, Commander of U. 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 C., February 8, 1990. i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4, No. 1 (Spring 1990).

Tolz, Vera. "Russia: Westerners Continue to Challenge National Patriots." *RFE/RL Research Report*. December 11, 1992.

Walfowitz, Paul D. "Clinton's First Year." *Foreign Affairs*. Vol. 73, No. 1 (January/February 1994).

Waltz, Kenneth N.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Fall 1993).

Xin Dun. "China's Economic Strength is Overestimated." *Beijing Review*. June 14~20, 1993.

Youn, Jungsuk. "Japanese Attitude toward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 (Spring 1992).

"China Nuclear Force Called Minim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5, 1994.

Makeev, B. "Kuril'skaia problema: voennyi aspekt." *Mirovaia ekonomika i mezhdunarodnye otnosheniia*. No. 1, 1993.

Shaposhnikov, E. "O kontseptsii bezopasnosti Rossii."

Mezhdunarodnaia zhizn'. No. 1, 1993.

3. 기 타

China Dail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Japan Times.

Izvestiia.

Krasnaia zvezda.

Mezhdunarodnaia zhizn'.

Nezavisimaia gazeta.

Rossiiskaia gazeta.

「讀賣新聞」.

「讀賣新聞」.

「東京新聞」.

「朝日新聞」.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 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 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1 貨幣 經濟 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統一韓國의 등장에 따른
東北亞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研究報告書 94-2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2月 日

發行日 1994年 12月 日
